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청년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 불평등 관계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현아

청년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 불평등 관계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임 동 균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현 아

박현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김 석 호 (인)

부 위 원 장 추 지 현 (인)

위 원 임 동 균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을 밝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기존 연구는 공정성 인식의 다차원성에 주목하려 하였으나,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공정성 인식이 이질적일 수 있음은 간과하였다. 공정성 인식은 개인의 복합적인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다면적일 수 있으며, 공정성 논란이 주로 몇몇 불평등 관계에서의 자원분배 갈등으로 이해되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공정성 인식의 다차원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공정성 인식을 실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정당성 평가로 정의하고, 학력 및 학벌, 노동시장, 젠더, 세대, 출신 계층과 관련된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사회적 집단 쌍 간의 대립구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종류의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평가가 어떤 정의태도를 구성하며 분배정의와 관련된 공정성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정성 인식을 파악한 뒤에는 이러한 인식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 구조화되는 것인지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 믿음 및 태도의 두 차원에서 구체적인 형성 기제를 확인하고, 공정성 인식의 정치사회적 함의 또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2021년 「한국인들의 세대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크게 세 가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불평등 관계별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은 성별과 계층에 따라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성취 지위에 따른 불평등에서는 사회적 위치가, 귀속 지위에 따른 불평등에서는 정치적 믿음 및 태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청년

남성이 청년 여성보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학벌 영역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상향이동 전망의 영향력이, 젠더·세대·출신 계층 영역에서는 보수적 이념 성향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이렇듯 같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라고 할지라도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영향력이 큰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삶의 불확실성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 또한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다양한 불평등 관계에 대한 공정성 평가들이 어떤 구조화된 연결양상을 보이며 공정성 스키마로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은 ‘불평등 불공정형’과 ‘불평등 공정형’, ‘반-학벌주의’ 유형과 ‘학벌주의’ 유형의 네 가지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학벌과 관련된 불평등에서 청년층 공정성 인식의 이질성이 두드러졌다. 네 종류의 공정성 인식 유형은 전반적인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 그리고 학벌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완화 혹은 유지에 있어 서로 다른 답을 ‘공정’이라고 제시한다. 학벌은 청년층 공정성 인식의 이질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다른 영역의 불평등에서는 중도적 입장을 보이는 청년들이 많은 반면, 학벌 영역에서는 학벌에 따른 불평등이 ‘공정하다’ 혹은 ‘불공정하다’로 인식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온 학벌주의의 영향 아래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인식 유형의 기타 정치사회적 태도와의 연관성을 드러내어 정치사회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 유형은 개별 공정성 논란 사건에 대한 평가는 물론, 그들의

복지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벌주의’ 유형과 ‘불평등 공정형’은 ‘불평등 불공정형’과 ‘반-학벌주의’ 유형보다 개별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불공정성 인식이 더 높았으며 복지태도 역시 더 부정적이었다. 특히, 복지태도의 경우 ‘학벌주의’ 유형은 사회적 집단 간 격차 축소는 꺼려하지만 최소한의 복지는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을, ‘불평등 공정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가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개인이 ‘공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정치사회적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사회적 집단 간 소득격차와 분배정의에 관한 공정성 인식의 다차원성과 그것의 유형 및 결정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정량적 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이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 믿음 및 태도의 영향에 따라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공정성 인식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 공정성 인식의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내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청년층은 공정성에 민감하다’는 세대론을 넘어 어떤 청년이, 어떤 공정성에, 왜 민감한 것인지, 더욱 구체적인 공정성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공정성, 불평등, 청년, 사회적 집단, 잠재집단분석

학번 : 2020-20401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 2 절 연구 질문과 논문의 구성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 1 절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9
제 2 절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
제 3 절 불평등 및 공정성 인식에 따른 복지태도	29
제 3 장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34
제 1 절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34
제 2 절 변수 정의	34
제 3 절 분석 결과	38
제 4 장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 유형	46
제 1 절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46
제 2 절 변수 정의	47
제 3 절 분석 결과	47
제 5 장 공정성 인식 유형의 정치사회적 함의	58
제 1 절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58
제 2 절 변수 정의	58
제 3 절 분석 결과	60
제 6 장 결론	65
참고문헌	69
Abstract	84

표 목 차

<표 1> 분석변수 기초통계량	37
<표 2>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 영향 요인 다중 회귀분석 결과	41
<표 3>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 최대 영향 요인	44
<표 4> 잠재집단분석 활용변수 기술통계	47
<표 5>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48
<표 6> 잠재집단 명명과 상대적 비율	50
<표 7> 잠재집단별 기초 분석	53
<표 8> 공정성 인식 유형 구조화요인 다항로지트 분석 결과	55
<표 9> 공정성 논란 사건 평가 변수 기초통계량	59
<표 10> 복지태도 변수 기초통계량	59
<표 11> 공정성 논란 사건에 ‘매우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 ..	62

그 립 목 차

<그림 1>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 유형	50
<그림 2> 공정성 인식 유형별 공정성 논란 사건 평가	60
<그림 3> 공정성 인식 유형별 재분배태도	6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난 몇 년간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였다.¹⁾ 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논란부터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조국 사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국공 사태’)과 공공의과대학 신설 반대 전공의 파업,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LH 사태’)까지 공정성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논란이나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총칭하여 ‘공정성 논란’이라 일컫기도 한다.

한편,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사회갈등이 주로 청년층, 그 중에서도 청년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세대는 공정성에 민감하다’는 ‘공정성 세대론’과 ‘20대 남성이 공정성에 특히 민감하다’는 ‘이대남’ 담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²⁾ 청년층은 개인주의와 권리의식 혹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세대로 호명되었다. 청년층은 한편으로 ‘MZ세대’로서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설명,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며 공정하지 않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하는 권리의식이 뚜렷한 세대³⁾로, 또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더욱 불

1)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과 불만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아니다.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 공론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0년대 초반 이명박 정권 시기이지만(박효민 & 김석호, 2015), 공정성이 정치적 구호로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거나 사회적 논의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갈등으로 추측된다.

2) 특히, 21년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 이후, 공정성에 대한 청년 남성의 민감함과, 청년 여성과 남성 간 공정성 인식 격차가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3) 김창우 외. “공정·실리 우선하는 MZ세대 ‘스윙 보터’로 났다”. 「중앙선데

평등해진 사회에서 성장하며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익 추구를 공정성으로 포장하는 세대⁴⁾로 묘사되었다. 특히 청년 남성의 경우, 정치적 보수화와 반페미니즘 성향과 함께 공정성에 대한 강조로 정치적 태도가 수렴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처럼 ‘공정성’은 근래의 사회적 담론을 장악해가며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인 것처럼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공정성 붐’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들도 거듭 잇따랐다. 공정성에 대한 민감함이 청년층의 세대적 특성이라는 진단 외에도, 그간 논란이 된 여러 사건들이 절차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등 다양한 가설과 해석이 제시되었다. 절차공정성에 주목하는 입장은 공정성 논란 사건들이 절차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국공 사태’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을 강제한다고 인식되어 갈등이 격화하였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학계에서는 공정성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성 청년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마경희 외, 2020).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러한 청년들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여기며,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을, 소득 재분배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정성이 이토록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중요한 사회적 규범으로 떠올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청년층의 세대적 특성 혹은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 2021년 4월 10일

4) 조혜정, “청년층, 생존에 내몰려 공정성에 민감… ‘세대 연대’ 절실”. 「한겨레」. 2018년 2월 12일

이익 추구 성향의 심화 때문인지에 대해 여러 상충하는 주장들이 제시된 가운데, 보다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개별 공정성 논란이 특정 사회적 집단들 간의 자원분배 갈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위치 및 각자의 평가에 따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공정성 논란의 갈등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 논란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장년 (소위 ‘586 세대’),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과 같이 자원분배를 두고 갈등하는 대립적 관계에 놓인 한 쌍의 사회적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반응 또한 각양각색인데, 예를 들어 ‘조국사태’에서 일부 ‘명문대생’들이 학내 시위를 벌이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때, 어떤 ‘비명문대생’들은 이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칭하며 넘을 수 없는 학벌의 격차를 느낀다고 평가하였다.⁵⁾ 또한 ‘인국공 사태’에서는 공항공사의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 직원들과 대립하였으며,⁶⁾ 공채 시험이 정규직 채용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는 주장⁷⁾이 오히려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 차별을 지속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장혜경, 2020). 한편으로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공정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여론이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정의에 대해서는 무심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조국 사태’에서 대학 입시 과정의 비리를 규탄하며 떠들썩하던 여론은 장애인 학생의 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⁸⁾에서는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입

5) 김희진, 탁지영, & 조문희. 비명문대·지방 청년이 보는 ‘조국사태’… “그들끼리 싸우는 상황…공정경쟁은 불가능”. 「경향신문」. 2019년 8월 29일

6) 최민지. “부러진 펜?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져야 한다”. 「경향신문」. 2020년 7월 31일

7) 한승곤. “부러진 펜 운동 시작하자… ‘인국공’ 사태 2030 집단 움직임으로”. 「아시아경제」. 2020년 6월 24일

8) 김지은, “‘입시조작’ 진주교대, 장애등급으로 수험생 평가했다”. 「한겨레」. 2020년 7월 31일한겨레. 2021년 9월 30일

장과 반응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평등한 관계들 각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개별 공정성 인식이 복합적으로는 어떤 정치사회적 태도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 한 종류의 불평등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청년들의 복합적인 공정성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공정성 연구와 크게 두 가지 차별점을 갖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의 공정성 인식이 불평등한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다차원적일 수 있음을 간과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라 여러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당성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그간 공정성 인식은 공정성 평가의 대상에 따라 분배·절차·기회·상호작용 공정성 등으로(Greenberg & Colquitt, 2013), 아니면 분배정의 원칙(distributive justice principle)에 따라 형평·평등·필요 원칙 등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었다(Deutsch, 1975; Miller, 1992; Reeskens & van Oorschot, 201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공정성 인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간과하였으며, 특히 불평등이 사회적 집단 쌍 간 대립의 형태로 제시되었을 때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사회적 집단을 기반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고 정체성 및 정치사회적 태도를 형성하기에(Turner, 2010), 개인의 정의 태도에 있어 사회적 집단은 매우 중요하다(Schmitt, Branscombe & Kappen, 2003). 공정성 판단을 내리는 순간 개입하는 개인의 복합적인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공정성 인식 또한 다면적일 수 있다. 공정성이 사회적 집단 간 자원분배 갈등으로 이해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공정성 인식의 복합성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정성 인식을 집단 간의 대립 구도와 격차를 중심으로 측정하여 집단 간

불평등과 공정성이 어떤 정의 태도를 구성하며 스키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Bonikowski & DiMaggio, 2016).

둘째, 이 연구는 청년 개인이 보이는 공정성 인식의 다차원성과 청년들 간의 인식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 믿음 및 태도의 두 차원에서 공정성 인식 형성 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와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이데올로기적 요인, 계층이동 인식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을 개별적으로는 제시하고 있으나(e.g. Kluegel & Smith, 1986; Zinni, 1995; Rainer & Seidler, 2008),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주된 공정성 인식 형성 기제를 뚜렷하게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e.g. d'Anjou, Steijn, & Van Aarsen, 1995; Ng & Allen, 2005). 이 연구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한국 사회의 ‘공정성 붐’을 설명하는 가설들을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 믿음 및 태도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더 적합한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공정성 인식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정성 인식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이동 전망과 같은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적 위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지(Tajfel, 1978;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Oakes, Haslam, & Turner, 1994; Reicher & Hopkins, 1996; Reynolds, Turner, Haslam, & Ryan, 2001; Schmitt et al., 2003; Louis, Duck, Terry, Schuller, & Lalonde, 2007; Shariff, Wiwad, & Aknin, 2016), 아니면 사회적 규범이나 정치적 성향, 지배 이데올로기 등의 정치적 믿음 및 태도 차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지(Kluegel et al., 1986; Skitka & Tetlock, 1992; Scott, Matland, Michelbach, & Bornstein, 2001; Jost, Pelham, & Carvallo, 2002; Staerkle, Likki, & Scheidegger, 2012)를 두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어떤 요인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지 확인하여 공정성 인식 형성 기제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정성 붐’이 청년층의 세대적 특성 혹은 이해관계 정당화와 같은 사회적 위치 차원 때문인지, 절차공정성이나 정치적 보수화와 같은 정치적 믿음 및 태도 차원으로 인함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인들의 세대와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크게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그 상대적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중 선형 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파악한다. 본 연구는 교육, 노동, 젠더, 세대, 출신 계층의 다섯 영역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덟 종류의 소득불평등(고졸-대졸, 인서울-지방대, 명문대-비명문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장년-청년, 고소득층 출신-저소득층 출신)에 대한 정당성 평가 문항을 공정성 인식 변수로서 사용한다. 다음으로,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공정성 인식 유형을 도출한 뒤, 이 유형들을 구조화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개별 불평등 관계에 대한 공정성 평가들이 어떻게 서로 구조화된 연결양상을 보이며 ‘공정성 스키마’로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특히 어떤 불평등 영역에서 청년층의 이질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에서 도출한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라 공정성 논란 사건들에 대한 반응과 복지태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공정성 인식 유형이 구체적인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타 정치사회적 태도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지 파악하여 공정성 인식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질문과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청년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둘째, 청년들이 보이는 공정성 인식의 다차원성과 개인 간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이 공정성과 관련된 사회적 사건의 평가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란이 주로 몇몇 불평등 관계에서의 자원분배 갈등으로 이해되고 있기에 다양한 불평등 관계를 구분하여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인 믿음 및 태도의 두 차원에서 청년층 공정성 인식의 내부적 복잡성과 개인 간 이질성을 야기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인식 유형의 여타 정치사회적 태도에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공정성 논란 사건 평가는 물론, 복지태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절에서는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집단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검토한다. 제2절에서는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경향을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 믿음 및 태도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불평등 및 공정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자료 및 방법을 소개하고 몇 가지 예비적 분석을 수행한다. 본격적인 잠재집단분석에 앞서, 각 불평등 영역에서 어떤 요인의 효과가 두드러지는지, 그리고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 믿음 및 태도 중 어떤 차원이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을 더 잘 설명하는지 예비적으로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여러 불평등 관계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패턴과 궁극적으로는 공정성 인식 유형을 도출한다. 제3장의 분석이 개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제4장의 분석은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른 개별 공정성 평가가 어떤 양상을 띠며 분배정의와 관련된 공정성 스키마를 구성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 개인 내부와 청년층 내부의 공정성 인식의 이질성 또한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에서 도출된 공정성 인식 유형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라 여러 공정성 논란 사건들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공정성 인식이 복지태도에도 체계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 및 정리한 뒤,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논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1.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

불평등은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이자 현상으로, 개인이나 사회적 집단들 간에, 그리고 사회 전반의 자원이나 지위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리킨다(신광영, 2013). 경제, 사회, 문화, 생물학적 특성 등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 중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다른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주로 측정이 용이한 소득 및 임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신광영, 2013; 김영주 & 나진경, 2018). 사회학은 학문의 태동기부터 불평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불평등의 객관적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고(Champernowne & Cowell, 1998), 2010년대 중반부터는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연구로 분석 대상이 확대되었다(황선재 & 계봉오, 2018).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졌으며(Bavetta, Li Donni, & Marino, 2019), 또한 객관적인 불평등 수준과 주관적인 불평등 인식 간에 큰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다(Niehues, 2014; Hauser & Norton, 2017; 황선재 외, 2018).

이후 불평등 인식 연구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기회와 결과에 있어서의 불평등 등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general attitude)를 분석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불평등 인식 수준이 객관적인 불평등 현상과 얼마나 같거나 다른지(Gimpelson & Treisman, 2018),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개인이 불평등을 정당

화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분석해왔다(Costa-Lopes, Pereira, & Jost, 2013).

그러나 위와 같이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만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적 구조와 관계의 영향력을 무시하며(Billig, 1976; Turner, & Onorato, 1999; Hollander & Howard, 2000), 사회적 맥락, 규범, 편견의 작동이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Minard, 1952; Brown, 1995). 사회 현실이 사회적 집단에 기초해 있기에(group-based nature of social reality) 개인 간 심리적 성향의 차이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기보다는⁹⁾ 사회적 집단들 간의 관계의 정치학을 포괄하는 불평등 인식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Tajfel, 1978; Schmitt et al., 2003). 이러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불평등 연구에 있어 사회적 집단을 고려하는 새로운 이론적 흐름이 대두되었다.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해 다룬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자기 범주화 이론(Self Categorization Theory)이 있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개인은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집단 정체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태도 또한 특정한 맥락에서 두드러지는 불평등 관계의 종류와 방향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게 된다(Tajfel & Turner, 1979).

먼저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은 불평등을 정당화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

⁹⁾ 불평등 정당화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 중 하나인 사회 지배 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이나 사회 지배 이론(Social Dominance Theory)은 내집단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집단 간 위계질서를 선호하는 개개인의 심리적 성향을 강조한다(Sidanius et al., 2015).

의 구성원은 불평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특히, 부족한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외집단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평등을 공정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e.g. Louis et al., 2007). 이와 비슷하게, 자기 범주화 이론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회적 집단에 동시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자기범주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 환경을 범주화하는 방식이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Turner et al., 1987; Reynolds et al., 2001). 이 두 이론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불평등의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집단이 문제시되는지, 각 개인이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불평등이 어떤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평가하게 된다(Oakes et al., 1994; Reicher et al., 1996).

또한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범주화 이론은 불평등이 완화 혹은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집단들 간에 어떠한 대응과 실천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Tajfel, 1981; Schmitt et al., 2003). 먼저 약자 집단의 경우, 사회적 이익이 사회적 집단에 따라 분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이 설득력 있고 정당하다고 느끼며, 자신들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순응하기보다 저항하게 된다. 한편 특권 집단의 경우 언제나 불평등을 옹호하거나 약자 집단을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이 당연시하던 불평등에 기반한 지위와 권력이 위협받을 때 불평등을 더욱 공정하다고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집단은 1) 어떤 사회적 집단들 간의 불평등인지, 그리고 2) 특정 사회적 집단과 관련된 개인의 위치는 어떠한지의 두 차원에서 개인의 불평등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분배공정성, 준거 구조, 그리고 사회범주화 접근

공정성은 ‘이상으로서의 평등’과 ‘경험적 사실로서의 불평등’ 사이에서 정당한 불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이자 객관적 기준이다(장상우, 김상욱, & 신승배, 2015: 20).¹⁰⁾ 현대 사회의 불평등 현상은 그 원인과 유형, 대상이 더욱 다각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으며(신광영, 201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 즉, 공정성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다(김석호 외, 2021).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심각한 경쟁에 처해 있음에도 대다수가 여전히 고도성장기의 사회 이동을 기대하며, 절대적 빈곤보다는 사회적 집단 간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박효민, 2019). 이에 사회구조와 제도, 문화와 관습에 스며있는 불평등에 대해 개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장상우 외, 2015: 25).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을 논하기에 앞서, 공정성 개념과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의 역사적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¹⁰⁾ 한편, 대표적으로 여성학과 같은 다른 분과 학문에서는 공평(fairness)이나 형평(equity)보다 평등(equality)을 상위의 개념으로 보며, 정의를 공정으로 환원하는 입장에 반대한다(이재경, 2018; 김정희원, 2020). 공정성 이론은 보통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용인하며, 적절한 불평등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규범을 파악하고, 이러한 규칙이 거시·미시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여성학은 교환관계의 형평은 물론, 이후 공정성 이론이 포괄하게 되는 절차와 상호작용에서의 공정을 “평등 의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본다(이재경, 2018). 공정이나 형평이 불평등한 젠더 관계나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를 통한 비남성 억압에 대한 페미니즘의 분석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Young(1990)은 일찍이 이러한 공정성 이론들을 ‘분배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한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정의관은 사회정의를 분배의 관점에서만 설명하며, 제도적 맥락, 차이를 둘러싼 사회집단들 간의 관계, 분배의 질과 분배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지배와 억압과 같은 권력관계의 구조적이고 역동적인 성질을 누락 혹은 간과하여 정의를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환원한다.

현대 공정성 연구는 주로 교환이론에 토대를 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상적 교환관계에서 보상 결과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박효민 외, 2015). 초기 공정성 이론은 1960년대 Adams와 Homans의 형평 이론(equity theory)으로부터 발전하였다. 형평 이론은 개인이 집단의 성과물을 산출하는데 기여한 정도(input)와 그에 따른 보상(output) 간의 비율을 타인의 기여와 보상 간 비율과 비교하여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을 평가한다고 설명한다(Adams, 1965; Homans, 1974).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투자와 성과 간의 균형을 원하고, 이러한 균형을 자신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평 이론에 기반한 분배공정성 연구는 직접적인 교환 관계 이외의 사회적 관계나 귀속 지위에 따른 보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Berger, Zelditch, Anderson, & Cohen, 1972). 또한, 개인이 투입과 보상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분배공정성 평가 과정에 집단 규범이 강하게 개입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하였다(Walster, Berscheid, & Walster, 1973).

이후 공정성이 단순히 개인의 물질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상징적이며 심리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이론들이 제시되었으며(Lind & Tyler, 1988), 형평 원칙 이외에도 평등과 필요 원칙과 능력, 노력, 생산성 등을 중요한 공정성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론들이 등장하였다(Mikula, 1984; Reis, 1984; Tornblom & Jonsson, 1985).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공정성 이론 역시도 개인이 어떤 요소가 특정 분배 상황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는지, 즉, 무엇이 보상을 받을 만한 기여인지 인식하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자기 정의(self identifi-

ication)와 사회적 집단에서의 소속감, 그리고 집단 이익 추구 성향 등을 무시하여, 분배의 사회적 차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Tajfel, 1981; Wenzel, 2001). 이러한 지적들을 반영하여 공정성 연구에 있어 분배의 사회적 차원이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는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그러한 이론들 중 첫 번째는 지위 가치 이론(status value theory: Berger et al., 1972; Berger, Ridgeway, & Zelditch, 2002)이다. 이 이론은 형평 이론의 개인주의적 접근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며, 이러한 보상 체계가 사회적 수준에서 준거 구조(referential structure)로서 공유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준거 구조란 사회적 보상 수준과 관련된 지위 특성(status characteristic)에 대한 일반화된 문화적 믿음(Berger et al., 2002)이며, 지위 특성은 행위자를 지위 가치(status value)와 능력 및 자질에 차이가 있는 사회적 범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Berger et al., 2002).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거나 더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고 여기는 태도는 성별 범주에 가치, 능력, 자질 등을 차등 부여하여 성별을 지위 특성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범주에 이러한 차등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지위 정형화(status typification)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위 특성은 상대적으로 공고하게 유지된다(Berger et al., 2002). 지위 가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성별, 연령, 인종 등과 같은 자신의 지위 특성을 보상받아야 할 가치로 여기며, 이러한 지위 특성의 조합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적합한 보상을 체계화한 구조(범주 구조; categorical structure)에 기반하여 보상의 공정성을 평가한다(Jasso & Rossi, 1977).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미시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보상의 국지적 비교를 넘어서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인식 구조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방식을 포착하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뿐만 아니

라 사회적 집단에서의 소속과 사회적 범주가 보상 수준과 연계되는 과정을 묘사한다는 강점을 갖는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위 가치 이론은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전체 사회에 하나 이상의 준거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또한, 특정 분배 상황에서 여러 준거 구조 중 하나의 준거 구조가 선택되는 기준과 양상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준거 구조를 이루는 여러 지위 특성 중 어떤 요소가 분배 상황에서 부각되는지도 포착하지 못하였다. 즉, 지위 가치 이론은 준거 구조가 개인 간에, 그리고 특정한 분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상과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Cook & Parcel, 1977; Walster et al., 1973; Wenzel, 2001). 예를 들어 Jasso and Rossi(1977)의 임금 분배 준거 구조에 대한 연구는 이론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Faia, 1980). Jasso and Rossi가 측정된 준거 구조가 이상적인 분배 상태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의 분배 상황이 비네트(vignette)에 반영된 정도를 평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공정한 분배에 대한 믿음 체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특히 Shepelak and Alwin(1986)은 Jasso and Rossi의 연구에서 공정한 분배에 대한 개인 간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하나의 준거 구조가 사회적으로 공유된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준거 구조가 일정 부분 공유된다고 해도 개인의 자신의 임금에 대한 공정성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¹¹⁾ 공정한 분배 기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연구 또한 보편적으로 합의된 공정성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직접적으로 준거 구조를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전성표(2006)는 한국사회에 세 가지의 분배 원칙 선호 유형이 존재하며 분배 원칙 선호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¹¹⁾ Shepelak et al.(1986)은 오히려 개인의 소득 수준이 개인의 임금 공정성 평가에 더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세 가지의 선호 유형은 각각 1) 성과와 업무 능력과 같은 실질적 기여, 2) 근속년수, 교육수준, 자격증과 같은 잠재적 기여, 3) 나이와 성별로서, 분석 결과 성별, 취업여부, 직장형태, 혼인상태, 연령 등에 따라 선호하는 분배 원칙이 다르게 나타났다.¹²⁾

지위 가치 이론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분배공정성에 대한 사회범주화 접근(social categorization approach to distributive justice)’은 공정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분배 상황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과 분배 상황을 구조화하는 방식, 즉, 주체와 상황을 사회인지적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이 공정성 인식에 핵심적이라고 설명한다(Wenzel, 2000). 사회 범주화 접근은 분배 정의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또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는 상태이기에(Lerner, 1980; Buchanan, & Mathieu, 1986; Wenzel, 2001), 자격(entitlement) 개념이 분배 정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Major, 1994). 이 접근은 앞서 언급한 자기 범주화 이론의 논리체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개인은 사회적 범주를 기반으로 분배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분배 상황에 관련된 존재(개인 혹은 집단)가 누구이며, 이러한 존재가 보상 체계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분배 자격을 다르게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은 특정 분배 상황과 가장 관련 있는 특성(prototypical dimension)이 무엇인지 판단하며,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12) 전성표는 이를 각각 “실질기여에 근거한 분배원칙(형평)”, “기여잠재력에 근거한 분배원칙(잠재력)”, “수요에 근거한 분배원칙(필요)”라 명명하고 있으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임금을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이 보상의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자원을 분배하여 구성원의 복지 및 개인 역량 계발을 증진하고자 하는 필요 원칙이라 명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성표는 서구 사회와 다르게 한국 사회는 남성이 필요 원칙에 따른 분배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이는 필요 원칙의 조작적 정의가 잘못 설정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남성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유리한 방향의 임금 분배를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현대 사회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임금 분배는 필요 원칙보다는 사회적 범주에 따른 불평등이라 명명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우선적인 범주(primary category)가 무엇인지 선정한다. 그리고 비슷한 사회적 범주는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사회범주에 규범적 위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사회적 범주에 따라 내집단 편향이나 집단 응집력 등을 보인다. 이처럼 개인이 분배 상황과 이를 둘러싼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회인지적으로 범주화하는 방식은 누가 분배 상황의 도덕적 커뮤니티(Deutsch, 1975; Opatow, 1990)에 속하거나 배제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제2장 1절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평등은 자원이나 지위에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을, 공정성은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사회적 기준을 의미하며,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고 다각화됨에 따라 정당한 불평등 수준과 기준에 대한 공정성 합의가 더욱 중요해져 왔다. 사회적 집단에 주목한 불평등과 공정성 이론을 각각 살펴보면, 불평등 연구 중에는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범주화 이론이, 공정성 연구 중에는 지위 가치 이론과 사회범주화 접근이 대표적이다. 그간 불평등 태도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집단에 기초해 있는 불평등을 사회 전체 차원의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 측정하여, 사회적 집단 간의 관계의 정치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였다.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범주화 이론은 사회적 집단의 관점에서 불평등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이론들로, 불평등에 대한 태도가 불평등 관계의 종류와 개인의 사회적 위치 및 정체성에 따라 상이하며 내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공정성 이론 중에는 지위 가치 이론이 형평 이론의 개인주의적 접근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범주에 따른 보상 수준에 대한 공유된 믿음 체계인 준거 구조를 제시하였지만, 준거 구조의 규범성을 강조하다보니 그 다차원성은 간과하였다. 이에 반해 분배공정성에 대한 사회범주화 접근은 분배정의 인식에 있어 복합적인 사회적 범주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어떤 사회적 범주가 특정 보상과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이론들은 1) 어떤 사회적 집단 간의 불평등인지, 2) 특정 불평등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지, 그리고 3) 사회적 위치는 어떤 개인의 특성과 분배 상황에 대한 범주화를 통해 개인에게 인식되는지의 세 차원에서 사회적 집단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집단과 관련하여, 불평등과 공정성 간의 관계는 활발히 탐구되지 못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주로 사회학을 중심으로 사회구조적·객관적 측면에서, 공정성이 주로 사회심리학을 중심으로 미시사회적·주관적 측면에서 연구되면서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박효민 외, 2015; 황선재 외, 2018). 불평등 연구가 구조적·객관적 측면에서 주관적 인식 및 태도로 연구 관심을 확장한 이후에도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과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불평등 관계의 종류와 개인의 사회적 범주에 따라 공정성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앞선 이론들의 주장처럼 한국 사회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에도 사회적 집단이 중요하여, 어떤 집단 간 대립이나에 따라 공정성 인식이 달라질까? 그리고 사회적 집단과 관련된 개인의 사회적 위치는 공정성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정량적으로 탐구하여, 공정성 인식의 사회적 차원을 확인하고 불평등과 공정성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을 ‘실재하는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의 정당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는 공정성을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불평등 수준을 합의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의 측면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집단 간 관계에서 보이는 불평등 상황 자체나 불평등의 정도가 정당한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범주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지위 가치 이론과 문제의식을 같이 하지만, 특정 사회적 범주에 적합한 보상수준을 파악하기보다는 특정 범주에서 대립하는 사회적 집단 쌍 간 불평등에 대한 정당성 평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평균값을 찾아내기보다, 공정성 인식의 ‘이질성’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질성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불평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격차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자기 정체성 이론과 자기 범주화 이론, 그리고 여러 사회적 범주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범주화 접근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여러 불평등 관계에 대한 공정성 스키마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식의 이질성이 돋보이는 불평등 영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제 2 절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적 위치

(1)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 인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주로 세대나 젠더를 중심으로 청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차이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처럼 세대와 젠더를 강조하는 용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청년 세대, 그리고 청년 여성 및 청년 남성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이다(마경희

외, 2020). 청년세대 담론은 청년층 연령 코호트 내 일부 사례들을 일반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청년층의 내적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전상진, 2002; 김선기, 2014). 마경희 외(2020)는 청년층 내부의 계층, 연령, 지역, 학력, 이념 성향 등에 따른 이질성에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간 언론을 통해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에 대한 무수한 담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공정성 인식은 주로 독립변수로 사용되거나, 단일한 문항으로 측정된 경우가 많다. 우선, 김영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된 기회공정성 인식의 경우, 청년층은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기회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 인식이 가족배경과 선형적인 연관관계를 보였다. 이희정(2018)의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는 노동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의 문항으로 측정된 청년층 공정성 인식이 경제적으로 독립했을수록, 기혼·정규직·비수도권 거주자·자가 거주자일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높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오래 유지되었을수록 긍정적이었다. 6개 영역의 기회공정성 인식을 합산하여 사용한 김재우(2019)는 청년층의 기회공정성 인식이 노년층보다 부정적이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기회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남성과 청년층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기회공정성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김석호(2018)는 청년층의 사회 이동성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4년을 기준으로 모든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낮으며, “한국의 소득차이는 너무 크다”로 측정된 분배공정성 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해 분배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청년층의 수용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높아져왔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년층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취업 부분 공정성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마경희 외(2020)의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측정된 공정성 인식에 대해 청년층보다 기성세대가,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고졸 이하 학력일수록, 진보 성향일수록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또한 청년 남성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 생각하였으며, 청년 여성의 경우 이에 더해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선택하였다.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연구된 주제는 ‘능력주의’인데, 우선 가장 일반적인 논의로는 청년세대의 마음 구조를 ‘생존주의’로 설명한 김홍중(2015)의 연구가 있다. 그에 따르면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구조 변동, 즉, ‘신자유주의적 제도화’라는 구조적 압력은 취직, 결혼, 출산이라는 ‘정상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일반화된 경쟁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 즉, 생존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로 만들었다. 이데올로기, 장치, 하비투스, 풍경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구조화 과정은 ‘생존주의 세대’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세대는 형평 원칙에 가까운 능력주의를 강하게 지지한다. 김선기, 천주희, 최태섭, 그리고 최혁규(2019)는 한국적 맥락의 능력주의적 공정성 개념은 실질적인 능력보다도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이나 ‘스펙’이 분배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변형된 능력주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년층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모순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순수한 능력이 아닌 그 외의 요소들(부모의 재력, 연고 등)이 크게 작용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

면서도 자신이 이룬 성취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함의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태심(2020)은 에코 세대가 산업화 세대에 비해 개인의 성공에 노력보다 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학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운보다 노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자료 도식화의 결과로서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통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청년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자면 청년층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시대적 배경과 마음의 동학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토대로 청년층을 단일한 세대로 설명하기에는 계층, 성별, 세대, 학력, 연령, 지역 등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이질성이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에서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에서 공정성 인식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변수가 제각각이라, 일부 상반되는 연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정성을 사회적 집단 간 대립을 통해 측정했을 때도 일반적인 공정성 인식과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계층이동 인식

상향이동 전망 가설(Prospect of Upward Mobility hypothesis)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재분배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이다(Benabou & Ok, 2001; Engelhardt & Wagener, 2014). 이 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계층 상승에 대한 대체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재분배에 반대하는 등 여러 보수적인 정치사회적 태도를 갖게 된다(Ravallion & Lokshin, 2000; Checchi & Filippin, 2004). 상향이동 전망 가설은 원래 개인의 객관적인 소득에만 적용되었으나, 주관적인 소득 인식과 자신이 아닌 자녀의 계층이동 전망, 그리고 하향이동 전망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Rainer et al.(2008)은 주관적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재분배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Buscha(2012)는 상향이동 전망의 효과가 상향이동 뿐만 아니라 하향이동 전망에도 존재하며, 상향이동 전망은 개인의 정치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하향이동 전망은 왼쪽으로 이동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하향이동이 상향이동보다 더 큰 효과를 주었다. Shariff et al.(2016)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과 자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불평등을 더 많이 용인하였으며, 특히, 자녀의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가 불평등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과 재분배에 대한 정치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상향이동 및 하향이동 전망이 청년층의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 일자리 위협감

일자리 위협감은 주로 집단 위협 이론(Blumer, 1958; Wallace & Figueroa, 2012)에서 특권적 지위를 가진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으로부터 일자리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과 그들을 배척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스스로가 태생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특권과 편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특권 집단은 종속적인 집단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 종속집단에 대한 편견을 생산하고 그들을 억압한다(Wallace et al., 2012). 일자리 위협감은 특히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데 많이 사용되는데, 일자리나 집과 같은 부족한 자원을 두고 원주민과 이민자 집단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된다. 예를 들어, McLaren(2003)과 Scheve and Slaughter(2001)은 일자리를 잃을 것 같

다는 두려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민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함을 밝혔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이주민을 수용하는 태도에 일자리 위협감이 큰 영향을 주었으며(최만식 & 조용하, 2014), 실업이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답할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았다(황정미, 2016). 이처럼 일자리 위협감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배척하는 태도를 높임으로써, 외집단의 낮은 임금을 정당화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세대와 성별 간 일자리 위협감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정치적 믿음과 태도

앞서 검토한 사회적 집단에 주목한 불평등 및 공정성 이론과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 그리고 계층이동 인식과 일자리 위협감은 모두 공정성 인식 형성 요인으로서 객관적 혹은 주관적 사회적 위치를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사회적 집단 및 범주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정성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행동하지 않으며, 때로는 합리적이 아닌 방식으로 불평등 태도와 공정성 인식을 형성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2항에서는 집단 정체성, 자기 이익 추구, 계층상승 전망, 일자리 위협감 등 사회적 위치와 관련된 요인 외에, 정치적 믿음과 태도와 관련된 영향 요인을 살펴본다.

(1) 이데올로기적 요인

공정성 인식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 태도, 행동을 보이게 되고, 이에 따라 특정한 공정성 판단을 내리게 된다(Ng et al., 2005). 여기서 ‘이데올로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포괄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념 성향과 더불어 ‘사회의 경쟁이 공정하다’는 일종의 체제정당화 인식만을 다루고자 한다.

다양한 선행 연구는 정치적 이념성향이 분배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례로 Skitka et al.(1992)은 보건 및 의료 영역에서 정치성향에 따른 분배 원칙 선호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념성향이 진보적인 경우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필요와 효율성 원칙을, 이념성향이 보수적인 경우 자원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효율성 원칙과 질병 발생 원인에 따른 차별 지원을 선호한다. Zinni(1995) 또한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내부 귀인을 많이 하고 형평 원칙을 선호하며,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외부 귀인을 많이 하고 평등 원칙을 선호한다고 분석하였다. Scott et al.(2001)은 이념성향이 여성의 공정성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남성의 공정성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며,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평등과 효율성을 더 중요시하고,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필요 원칙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는 체제 정당화가 있다. 체제 정당화 경향에 대한 논의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체제에 대해 인지적 지지를 보내는 성향이 있어서 자신이 실질적 혹은 인지적 불이익을 받더라도 체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믿고 싶어 한다고 주장한다(Jost & Banaji, 1994; Jost & Thompson, 2000). 체제 정당화 기제가 작동하면 계층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소

득 재분배에 더 반대하거나(Kluegel et al., 1986), ‘열등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우월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편견을 받아들이게 되는(Jost et al., 2002) 등 개인 및 집단 차원의 불평등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정당화하게 된다. 불평등이 공정한 체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념성향과 사회 경쟁 체제의 공정성 평가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인지적-동기적 성향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동기적 성향에는 인지적 종결 욕구와 권위주의 성향이 있다. 먼저, 인지적 종결 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는 혼동이나 모호함보다는 확고한 답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Kruglanski & Webster, 1996; Chirumbolo, Arzeni, & Sensales, 2004). 즉,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은 사람은 확고한 판단을 내린 이후에 그 판단을 고정시켜 ‘닫힌 마음’을 갖게 된다(Kruglanski & Webster, 1996). 이러한 성향이 높을수록 강한 판단적 몰입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견해를 갖게 되고 본래의 판단과 다른 선택을 잘 하지 않으며 휴리스틱이나 고정관념을 잘 사용한다(Kruglanski et al., 1988). Van Lange, Bekkers, Chirumbolo, and Leone(2012)에 따르면 높은 인지적 종결욕구는 보수적 이념성향과 사회적 문제에 관해 개인 탓을 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인지적 종결욕구는 체제 정당화 기제 중 하나(Wilson, 1973; Greenwald, 1980; Tajfel, 1981; Jost, Pelham, Sheldon, & Ni Sullivan, 2003에서 재인용)로서 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믿고 싶어 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 인지적 종결 욕구와 공정성 인식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인지적 종결 욕구가 전반적인 정치사회적 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 연구(Van Lange et al., 2012)에 비추어 보아 공정성 인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란 기존의 사회 질서와 전통, 규범을 중시하며 사회 변화를 기피하는 성향을 의미한다(Altemeyer, 1996). 이러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 사회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체제를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 한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들은 개방성이 낮고 성실성이 높으며(Duckitt & Sibley, 2010; Perry & Sibley, 2012; 하상웅 & 이보미, 2017에서 재인용),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개인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관습적인 집단 분류 기준을 더 많이 사용한다(민경환, 1989). Staerkl e et al.(2012)에 따르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으면 지배적인 규범에 적합한 분배를 지지하게 되며, 상호적인 의무 이행에 대한 강한 지지로 인해 형평성을 중시한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적 의무 이행에 따른 선별적인 복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Achterberg, van der Veen, & Raven, 2014).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종결욕구와 권위주의 성향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 공정성 원칙 선호: 결과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능력주의

공정성 인식은 공정성 원칙과 공정성 평가의 두 차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우명숙 & 남은영, 2021). 우명숙 외(2021)가 지적하듯이, 공

정성 인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이 공정성 원칙을 얼마나 선호하는지가 아닌, 각 공정성 원칙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하는지를 중심으로 공정성 원칙을 측정하고 있다. 나름의 내적 일관성을 가지면서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직하는 ‘공정성 원칙 선호 정도’와 현실에 편재하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정당성 평가인 ‘공정성 평가’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연구 설계에서 양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에 유의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정성 평가와 공정성 원칙을 분리하고, 능력주의 원칙, 절차 공정성 원칙, 결과공정성 원칙 선호 정도가 개인의 공정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결과공정성 원칙 선호는 보상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공동체에 기여하지 않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Greenberg, 1990; Skitka, Winkler, & Hutchinson, 2003). 절차공정성 원칙은 개인이 분배 결과만이 아닌 분배 과정의 공정성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도구적 모형(instrumental model)과 집단 가치 모형(group value model)의 두 이론이 존재한다. 먼저 도구적 모형에서는 개인들이 보상 분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보장하는데 도구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한다. 반면, 집단 가치 모형은 절차적 공정성이 중시되는 이유가 개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상징적·심리적 가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능력주의 원칙 선호는 “보상이 개인의 기여(능력)에 상응해야 공정하다” (마경희 외, 2020)는 형평 원칙에 가까운 공정성 원칙을 지칭한다. 능력주의 원칙에 따르면 공정한 보상의 기준은 기여와 능력이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지 않은 보상이나 분배는 불공정하다(마이클 영, 2020).

그간 결과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능력주의는 특정 조직에서 이러한 공정성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더불어 그것이 개인의 감정, 태도,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박효민 외, 2015).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능력주의·절차공정성·분배공정성 원칙에 대한 선호 정도가 공정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우명숙 외(2021)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격차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차별경험이 많은 사람이 소득격차가 더 적다고 인식하는 등(이웅 & 임란, 2014) 공정성 원칙과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공정성이 분배의 기준이고 불평등이 분배의 차등적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보상을 분배원칙에 따라 평가해야 하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오히려 자신의 현재 보상을 기준으로 자신의 기여 정도를 역으로 평가하여 보상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성표, 2006). 이처럼 공정성 원칙 선호가 불평등 인식이나 개인의 임금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존재하지만, 포괄적인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능력주의 원칙을 비롯한 세 가지 공정성 원칙의 선호 정도가 청년층의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자 한다.

제 3 절 불평등 및 공정성 인식에 따른 복지태도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해 왔다. 먼저 Taylor-Gooby(2001)는 복지태도를 복지 제도, 복지 비용, 소득 재분배, 복지국가 정당성 지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회 복지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한편 류진석(2004)에 따르면 복지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기준인 복지태도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감정, 신념, 행동 지향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개념의 다차원성으로 인해 복지태도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 혼재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태도를 “복지 및 관련 사회 현상에 대한 상황 인식과 정책 인식을 총칭하는 것으로, 믿음과 의견 등으로 표출되는 평가적 판단(evaluative judgement)”으로 정의하고자 한다(안상훈, 김영미, & 김수완, 2021).

복지태도는 국가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정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에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경험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류진석, 2004). 전통적으로 계급이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졌으나, 노동계급의 분화와 성, 세대, 종교, 인종, 민족, 자기 이해 등 비-계급적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급론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뚜렷한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 계급이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견인해온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르게, IMF 경제위기 이후 복지 제도화가 먼저 진행된 이후 복지태도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복지태도 형성 요인에 대한 탐구가 특히 중요하다(이보운 & 김동훈, 2015; 안상훈 외, 2021).

우선 계층의 측면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김영순 & 여유진, 2011; 여유진 & 김영순, 2015; 이상은 & 김희찬, 2019; 안상훈, 2020). 또 드물긴 하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의 영향도 검토된 바 있다(주은선 & 백정미, 2007;

안상훈, 2020). 그간의 경험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우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복지 확대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대표적이지만(주은선 외, 2007; 김윤태, 유승호, & 이훈희, 2013; 김희자, 2013; 이현우, 2013), 소득 고위층이나 중위층이 복지 확대를 더욱 지지한다거나(류만희 & 최영, 2009), 소득과 재분배 선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김영순 외, 2011; 모지환 & 김행열, 2009)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다.

계층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정치·심리학적 요소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우선, 연령,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 지향적이며(김신영, 2010),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복지 확대에 찬성한다(주은선 외, 2007). 특히, 세대 간 복지태도의 분열 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대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는데,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신세대 간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비교적 최근 들어 제시되어 왔다(박길성, 2011; 이상록 & 김형관, 2013; 김영순 & 노정호, 2017). 그 외에도 혼인상태(김신영, 2010)와 거주지역 및 주거 지위(안상훈, 2020) 또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올로기와 정치 성향, 지지 정당 등 정치심리학적 요소 또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준다(주은선 외, 2007; 최유석, 2011; 서복경 & 황아란, 2012; 김윤태 외, 2013). 이념 성향이 진보적이거나 진보 정당을 지지할수록 복지 확대에 우호적이고, 이념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보수 정당을 지지할수록 복지 축소를 선호한다(최유석, 2011; 김윤태 외, 2013). 그 외에도 복지 지위(안상훈, 2020), 사회화 과정에 따른 갈등의 허용도 등 가치와 규범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며(류진석, 2004), 사회 신뢰와 정책 신뢰, 반평등주의적

가치관과 이타주의적 태도도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성표, 2006; 주은선 외, 2007; 김신영, 2010; 이한나 & 이미라, 2010).

불평등 인식 또한 많은 요인들과 더불어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불평등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소득 분배 불평등, 세금 납부 불평등,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인식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이한나 외, 2010; 이충환, 2015; 여승현, 2016). 먼저 이충환(2015)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며,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아진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적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일관적인 친-복지태도를 보이고 경제적 불평등 인식이 낮을수록 비일관적인 반-복지태도를 보인다(여승현, 2016). 한편, 박선경과 이내영(2018)은 불평등 인식, 정부 책임 인식, 세금 부담 수용의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현상적 선호유지자’,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라는 네 유형의 복지태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발견이 복지태도를 이해하는 유용한 자원을 제공함에도,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불평등 태도만을 다룸으로써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른 불평등 인식의 이질성과 사회적 집단 차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 간의 불평등 관계에 대한 평가와 복지태도가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몇몇 연구들은 공정성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경쟁의 공정성과 임금 불평등 결정 요인에 대한 믿음 또한 재분배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Alesina & Angeletos, 2005). 사회의 경쟁 체제와 개인 간 임금 격차가 공정하다고 평가할수록, 그리고 출

생, 인맥, 부패가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재분배 정책 확대에 찬성한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는 주로 정부의 복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절차공정성이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정책 시행 결과 분배공정성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이지호 & 황아란, 2016; 이현우 & 박시남, 2016). 정부가 아닌 일반적인 국민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이현우와 박시남의 연구(2016)가 거의 유일한데,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수준이 불공정하며 소득불평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복지태도가 적극적이다.

이와 같이, 공정성 인식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탐구되지 못하였다. 특히, 불평등 관계의 종류와 개인의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차원을 가지는 공정성 인식이 복지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계층과 같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불평등 인식이나 공정성 인식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태도가 복지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이수빈, 2016)와 세부 이슈에 따라 복지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패널 연구(안상훈 외, 2021) 결과는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라 청년층의 복지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제 1 절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에 대한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을 불평등의 관계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2021년에 수행된 「한국인들의 세대와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세대와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는 KBS에서 주관하고 여론조사회사 한국리서치에서 수행한 온라인 설문 자료로서, 공정성 인식과 관련된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층 응답자(만 20세부터 만 34세)를 총 600명 포함하고 있어 청년층 공정성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일반적 사회적 태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 ‘사회적 합의와 연대’ 분야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다중 회귀분석은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장의 분석은 잠재집단분석을 수행하기 전의 예비적 분석으로서,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른 청년층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공정성 인식의 다차원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제 2 절 변수 정의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정성 인식을 ‘실재하는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의 정당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정의하며, 종속변수로서 다섯 개의 불평등 영역에서 여덟 가지 종류의 사회적 집단 간 소득 및 임금 격차가 얼마나 공정한지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육 영역에서 대졸과 고졸, 인서울과 지방대, 명문대와 비명문대 출신 간 소득불평등을, 노동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불평등을, 젠더·세대·출신 계층 영역에서 각각 남성과 여성, 장년과 청년, 고소득층 출신과 저소득층 출신 간 소득 불평등의 정당성을 물었다.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음 집단 간 임금 또는 소득 격차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해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을 1로,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을 4로 역코딩하여 4점 척도의 서열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종속변수의 값이 높을수록 해당하는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에 대해 공정하다고 평가한다.

독립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계층이동 전망, 일자리 위협감, 이데올로기적 요인, 인지적-동기적 요인, 공정성 원칙 선호를 사용하였다. 이 중 사회인구학적 요인, 계층이동 전망, 그리고 일자리 위협감이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적 위치 차원에, 나머지 요인이 정치적 믿음 및 태도 차원에 속한다. 사회인구학적 요인부터 살펴보면, 우선 연령은 연속변수로서 만 20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을 포괄한다. 성별은 여성을 0, 남성을 1로 코딩하였으며, 결혼 여부는 현재 결혼한 상태를 1로, 나머지 미혼, 이혼, 사별은 0으로 처리하였다.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1, 대학생을 2, 대졸을 3, 대학원 이상을 4로 처리하였다. 수도권 거주인 경우, 서울과 경기도 거주를 1로, 그 외 지역 거주를 0으로 처리하였다. 종교 유무의 경우 어떤 종교이든 종교가 있

는 경우를 1로, 없는 경우를 0으로 처리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해 사용하였고,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1) ‘최하층’ ~ (10) ‘최상층’ 응답을 그대로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계층이동 전망은 상향이동의 경우 (1) ‘상층으로 이동 가능성이 전혀 없다’ ~ (4) ‘상층으로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하향이동의 경우 역코딩하여 (1) ‘하층으로 떨어질 우려는 전혀 없다’ ~ (4)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의 서열변수로 사용하였다.

세대 간 일자리 위협감의 경우 ‘40, 50대가 자신의 일자리나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존재로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성별 간 일자리 위협감의 경우 ‘동년배 여성 혹은 남성이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존재로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위협감이 높을수록 4점에 가깝게 나오도록 역코딩한 뒤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위협감을 결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믿음 및 태도 차원 중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경우, 이념성향은 (0) ‘매우 진보적이다’ ~ (10) ‘매우 보수적이다’ 응답을 연속변수로, 경쟁 공정 변수는 ‘우리나라는 개인들 간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의 서열변수로 사용하였다.

인지적-동기적 요인의 경우, 먼저 인지적 종결욕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접하는 것을 좋아하는지(1: 매우 좋아한다 ~ 5: 매우 싫어한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접하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는지(1: 전혀 불편하지 않다 ~ 5: 매우 불편하다)’ 묻는 두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618). 권위주의 성향은 7문항으로 이루어진 권위주의 척도의 응답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764).

〈표 1〉 분석변수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교육	대졸과 고졸	600	2.203	0.789	1	4	
		인서울과 지방대	600	2.095	0.790	1	4	
		명문대와 비명문대	600	2.158	0.813	1	4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600	2.073	0.801	1	4	
		정규직과 비정규직	600	1.957	0.795	1	4	
	젠더	남성과 여성	600	2.197	0.931	1	4	
	세대	장년과 청년	600	2.200	0.708	1	4	
출신 계층	고소득층 출신과 저소득층 출신	600	1.813	0.752	1	4		
독립 변수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적 위치	사회 인구학적 요인	연령	600	26.937	4.194	20	34
			성별	600	0.522	0.500	0	1
			결혼 여부	600	0.143	0.351	0	1
			자녀 유무	600	0.112	0.315	0	1
			교육 수준	600	2.383	0.944	1	4
			수도권 거주	600	0.493	0.500	0	1
			종교 유무	600	0.348	0.477	0	1
			ln(가구 소득)	600	5.920	0.788	4.317	7.719
			주관적 계층의식	600	4.762	1.487	1	8
	계층이동 전망	상향이동 전망	600	2.280	0.687	1	4	
		하향이동 전망	600	3.008	0.761	1	4	
		일자리 위협감	세대 간 일자리 위협감	600	2.213	0.806	1	4
			성별 간 일자리 위협감	600	2.350	0.916	1	4
	정치적 믿음 및 태도	이데올로 기적 요인	정치적 이념 성향	540	5.019	1.788	0	10
			경쟁 공정	582	1.691	0.736	1	4
		인지적 -동기적 요인	인지적 종결욕구	600	3.477	0.780	1	5
			권위주의 성향	600	3.725	0.966	1	6.429
공정성 원칙 선호		능력주의 원칙	576	2.646	0.757	1	4	
		결과공정성 원칙	560	2.461	0.836	1	4	
	절차공정성 원칙	582	2.753	0.783	1	4		

마지막으로 공정성 원칙 선호의 경우, 능력주의 원칙은 ‘직장에서 받는 봉급은 철저히 능력과 공과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결과공정성 원칙은 ‘내 보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능력과 공과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는 쪽을 택하겠다’, 절차공정성 원칙은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나는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각각 역코딩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의 서열변수로 사용하였다. 청년층 분석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표 1>에 요약하였다.

제 3 절 분석 결과

청년층의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여러 독립변수의 표준화계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이후, <표 3>과 같이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영향력이 큰 요인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적 위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요인부터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득불평등은 명문대와 비명문대 출신 간 임금 격차와 같은 교육 영역이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가장 많은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과 계층이다. 청년층 내부에서는 성별과 계층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이질성이 두드러지며, 불평등 관계의 종류와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개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정성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세대와 출신 계층에 따른 임금 격차 공정성 인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 간,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 임금 격차를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을 경험한 청년이 많이 존재하여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나 기업 내 성차별 등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남성은 청년 여성에 비해 세대와 계층 간 격차를 제외한 모든 불평등에 대하여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남성 청년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매우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결혼 여부는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학력과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취직과 관련된 양육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학력 및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졸과 대졸 간 임금격차는 공정하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는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에 따른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교육수준이 기업 간 규모에 따른 불평등 평가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약하다. 지방에 사는 사람보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 임금 격차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명문대’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사실과 명문대 학생의 70% 이상이 수도권 출신¹³⁾이라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수도권에서의 경험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좋은’ 대학 진학과 관련된 욕망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역-학벌 간 공정성 인식의 연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 유무와 객관적 가구소득은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고용 형태, 젠더, 세대에 따른 임금 격차를 제외한 모든 소득불평등을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

13) 남윤서. “서울 10개대 입시, “수도권 출신 비율 학종에선 56%, 정시에선 71%” ”. 「중앙일보」. 2017년 3월 30일

은 학력 및 학벌,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데, 계층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격차가 귀속 지위보다는 성취 지위와 관련된 불평등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계층이동 인식의 경우 상향이동 전망이 높을수록 인서울과 지방대, 명문대와 비명문대, 그리고 세대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하향이동 전망은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데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간 서구의 선행 연구들은 하향이동 전망이 불평등 태도와 관련하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나(Buscha, 2012), 이러한 영향력은 주로 계층에 따른 격차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학벌과 연공제 등을 통해 상향이동을 꾀하는 심리가 불평등을 공정하다고 평가하는데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와 다르게 하향이동 전망 인식이 높을수록 출신 계층에 따른 격차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일자리 위협감의 경우, 젠더와 세대, 그리고 출신 계층에 따른 임금 격차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일자리 위협감이 높을수록 세대 간 불평등은 불공정하고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은 공정하다고, 성별 간 일자리 위협감이 높을수록 여성과 남성 간 불평등과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위협감이 성별, 세대,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평가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상이다. 세대 간 위협감을 느낄 때는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성별 간 위협감을 느낄 때는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게 되는 기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표 2>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 영향 요인 다중 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1) 고졸자와 대출자	(2)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 출신	(3) 명문대와 비명문대 출신	(4) 중소기업 과 대기업 근로자	(5) 비정규직 과 정규직	(6) 여성과 남성	(7) 청년과 장년층	(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출신
사회인구학적 요인								
연령	-.074	-.065	-.070	-.105*	.009	-.090*	-.068	-.032
남성	.089*	.129**	.139**	.113*	.126**	.361***	.059	.057
기혼	.102	.039	.066	.093	.044	.079	.086	-.022
자녀 있음	-.113*	-.073	-.116*	-.091	-.055	.035	-.036	.043
교육 수준	.118*	-.006	-.077	-.099*	-.004	.020	-.085	-.028
수도권 거주	-.022	.064	.103*	-.063	.021	-.039	-.016	-.048
종교 있음	-.039	-.046	-.051	-.012	.038	-.067	.026	-.059
ln(가구소득)	.001	.036	.050	.029	.039	-.039	.054	.038
주관적 계층의식	.148**	.183***	.234***	.149**	.077	.057	.042	.083*
계층이동 인식								
상향이동 전망	.022	.131**	.141**	.020	.039	-.044	.148**	.064
하향이동 전망	.006	-.015	.041	-.037	-.065	-.059	-.057	-.091*
일자리 위협감								
세대 간	-.051	.055	.064	-.011	.029	.067	-.138**	.096*
성별 간	.054	.009	-.007	-.003	.045	-.185***	.033	-.118*
이데올로기적 요인								
보수적 이념성향	.207***	.088*	.093*	.138**	.193***	.141**	.068	.168***
경쟁 공정하다	.036	.075*	.048	.065	.176***	.049	.125**	.168***
인지적-동기적 요인								
인지적 종결욕구	.018	.076*	.086*	.019	.008	-.013	.040	.005
권위주의 성향	.008	.037	.044	-.021	.075*	.046	.077*	-.045
공정성 원칙 선호								
능력주의	.074	-.008	-.042	.020	.070	.015	-.024	-.106*
결과공정성	-.005	-.003*	.017	-.003	-.007	.065	-.020	.107*
절차공정성	.031	.080	.066	.106*	.072	.028	.059	-.037
Cons	.980*	.305	.113	1.577**	-.089	2.210***	1.546**	1.377**
N	489	489	489	489	489	489	489	489
adj. R ²	.098	.110	.144	.076	.131	.234	.094	.121
F	3.647	4.003	5.109	3.000	4.680	8.450	3.545	4.357

1) *p*-values in parentheses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종속변수의 경우 응답값이 높을수록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인식.

다음으로 정치적 믿음과 태도 차원의 요인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경우,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세대를 제외한 모든 불평등 관계에 대해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념 성향의 넓고 강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한편, 우리 사회 경쟁이 공정하다고 평가할수록 인서울 대학과 지방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 그리고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체제 정당화보다는 정치적 보수화가 청년층이 불평등을 공정하다고 평가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데올로기적 요인은 젠더, 세대, 출신 계층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특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귀속지위와 관련된 불평등의 경우 이데올로기 가설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적-동기적 요인의 경우, 인지적 종결욕구는 학벌 영역에, 권위주의 성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에 한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인지적 종결욕구가 높을수록 인서울과 지방대,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 임금 격차가 공정하다고 평가하였고,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장년 간 임금 격차가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와 고용 형태 및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문화적 규범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특히, ‘지방대, 비명문대, 비정규직 집단이 인서울, 명문대, 정규직 집단보다 열등하다’는 식의 문화적인 위계의식이나 혐오가 낮은 경제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원칙 선호의 경우, 능력주의 원칙 선호가 높을수록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이 불공정하다고, 결과공정성 원칙 선호가 높을수록 인서울과 지방대 간 임금 격차는 불공정하고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은 공정하다고, 절차공정성 원칙 선호가 높을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공정하다고 평가하여 공정성

원칙 선호와 공정성 평가 간 복잡한 연관 관계가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능력주의는 ‘노력’을 강조하는 ‘약한 능력주의’가 아니라, ‘능력과 공과’를 강조하는 ‘강한 능력주의’로 정의되었는데(우명숙 외, 2021), 이는 출신 계층이 능력은 아니라는 믿음이 청년층 일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간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존속시키는 이데올로기로서만 주목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 연구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오히려 강한 능력주의가 불평등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한편, 절차공정성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은 공채 제도를 공정하다고 평가하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 또한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보수가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즉, 결과공정성 원칙 선호 정도가 높을수록 출신 계층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정하다고 평가한다는 결과는 ‘분배 결과가 공정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청년층의 다소 혼란스러운 인식을 드러낸다. 일부 청년들에 있어 결과공정성에 대한 선호는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수용하는 태도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다음으로 <표 3>에 정리되어 있듯이, 개별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에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영향 요인의 순위를 매겨보았다. 청년층 공정성 인식에의 성별과 계층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부각되는 영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학별 영역에서는 계층, 상향이동 전망, 성별 등 사회적 위치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학력, 노동시장 지위, 젠더, 출신 계층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서는 이념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고졸,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저소득층 출신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공정하다고 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보수적 이념 성향이다. 한편, 젠더, 세대,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에서는 일자리

위협감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소득불평등이라고 하더라도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특히 고용 형태, 젠더, 세대,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에 있어 계층보다 이념의 영향력이 훨씬 두드러진다는 분석 결과는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 격차를 강조해온 청년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예를 들어 주관적 계층의식은 학벌에 따른 불평등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을 평가하는 데에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학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성별과 연령과 같은 정체성 차원과 더불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감각,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과 분노, 우리 사회의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표 3>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 최대 영향 요인

상대적 영향력	(1) 고졸자와 대졸자	(2) 서울소재 대학 출신과 지방대 출신	(3) 명문대 출신과 비명문대 출신	(4)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	(5) 비정규직과 정규직	(6) 여성과 남성	(7) 청년과 장년층	(8) 저소득층 출신과 고소득층 출신
1순위	이념	주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이념	성별	상향이동	경쟁 공정
2순위	주관적 계층	상향이동	상향이동	이념	경쟁공정	성별 간 일자리 위협감(-)	세대 간 일자리 위협감(-)	이념
3순위	학력	성별	성별	성별	성별	이념	경쟁공정	성별 간 일자리 위협감(-)

(-) 표시는 표준화계수가 음수임을 의미.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과 계층이다. 청년 남성이 청

년 여성보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공정하다고 평가한다. 한편,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부각되는 영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성취 지위에 따른 불평등에서는 사회적 위치가, 귀속 지위에 따른 불평등에서는 정치적 믿음 및 태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학벌 영역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상향이동 전망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으며, 젠더, 세대, 출신 계층과 관련해서는 보수적 이념 성향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다르다는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청년 개인의 공정성 인식이 다차원적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불평등 관계에 따른 개별 공정성 평가가 어떤 공정성 스키마를 구성하여 청년층 내부에 얼마나 다양한 공정성 인식 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제 4 장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 유형

제 1 절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제4장에서는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 유형을 도출한 뒤, 공정성 인식 유형을 구조화하는 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분석 자료로는 제3장과 동일한 「한국인들의 세대와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잠재집단분석(LCA)은 독특한 태도 패턴으로 특징지어지는 집단(class, 계층)을 산출하여 개인 간 응답의 이질성을 드러내고, 전체 샘플을 이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인지적 하위집단을 도출한다(DiMaggio, Sotoudeh, Goldberg, & Shepherd, 2018). LCA는 다른 분석 방법들과는 다르게 변수들 간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정하지 않고, 관찰변수들의 패턴에 이를 발생시킨 잠재변수, 즉, 특정한 스키마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다(Bonikowski et al., 2016). 이렇듯 태도들 간의 관계성(relationality)과 개인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강조하기에, 서로 다른 잠재집단이 특정 영역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어떤 믿음, 인식, 그리고 관행을 보이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DiMaggio et al., 2018). 이 장에서는 다양한 소득불평등에 대한 개별 공정성 평가가 어떻게 서로 구조화된 연결양상을 보이며 분배정의 태도를 구성하는지 확인한다(fairness schema; Hunzaker & Valentino, 2019). 청년층에 있어 공정성 인식의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불평등 영역이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이질적인 공정성 인식을 구조화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변수 정의

잠재집단분석을 위해 앞 장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를 이분 변수로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즉, 임금 격차가 얼마나 공정한지 묻는 문항의 (1) ‘매우 불공정하다’ 와 (2) ‘대체로 불공정하다’ 를 0으로, (3) ‘대체로 공정하다’ 와 (4) ‘매우 공정하다’ 를 1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잠재집단분석 활용변수는 <표 4>에 정리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로는 앞 장에서 활용한 독립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4> 잠재집단분석 활용변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교육	대졸과 고졸	600	0.357	0.479	0	1
		인서울과 지방대	600	0.290	0.454	0	1
		명문대와 비명문대	600	0.325	0.469	0	1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600	0.283	0.451	0	1
		정규직과 비정규직	600	0.232	0.422	0	1
	젠더	남성과 여성	600	0.360	0.480	0	1
	세대	장년과 청년	600	0.333	0.472	0	1
	계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600	0.177	0.382	0	1

제 3 절 분석 결과

1.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 유형

활용변수로 사용한 8개 문항을 이항변수로 변환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 <표 5>와 같은 통계량을 얻었다. 복잡한 태

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집단분석에서는 절대적인 모델 적합도(absolute model fit)보다 상대적 적합도(relative fit)를 통해 더 높은 설명력과 내·외부적 타당성을 갖는 모형을 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Bonikowski & DiMaggio, 2021). 따라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기준으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절대적 모델 적합성을 의미하는 p-value를 표기하였다. <표 5>와 같이 AIC와 BIC의 값이 가장 작으며 p-value가 0.05보다 큰 4집단을 기준으로 공정성 인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5>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Model	Obs	ll(model)	자유도(df)	AIC	BIC	p-value
1-class	600	-2866.68	8	5749.359	5784.534	0.000
2-class	600	-2439.49	17	4912.988	4987.736	0.000
3-class	600	-2381.09	26	4814.185	4928.505	0.002
4-class	600	-2354.19	33	4774.38	4919.479	0.154
5-class	600	-2348.31	43	4782.627	4971.695	0.168
6-class	600	-2340.34	52	4784.685	5013.326	0.256
7-class	600	-2331.87	51	4765.734	4989.978	0.588

도출된 4개의 잠재집단의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패턴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불평등 관계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항목응답확률을 잠재집단별로 제시하고 있다. 항목응답확률은 특정 변수에 대해 특정 잠재집단에 속한 응답자가 1이라 답할 확률을 의미하기에, 본 연구의 경우 해당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답할 확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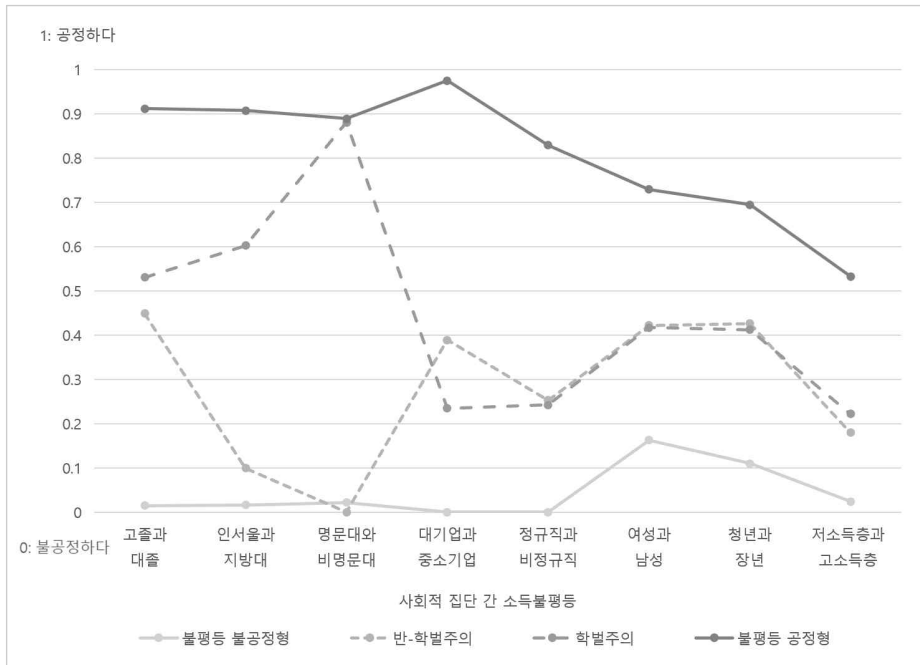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 유형을 살펴보면 1집단과 4집단, 그리고 2

집단과 3집단이 서로 대칭적인 인식 패턴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1집단과 4집단은 모든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거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모든 불평등 관계에서 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전체의 40.76%를 차지하는 1집단을 ‘불평등 불공정형’, 전체의 14.61%를 차지하는 4집단을 ‘불평등 공정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2집단과 3집단의 경우, 인서울과 지방대 간, 그리고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 임금 격차 공정성 인식에서만 대칭적인 패턴을 보이고 다른 관계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의 23.46%를 차지하는 2집단을 ‘반-학벌주의’ 유형, 전체의 21.17%를 차지하는 3집단을 ‘학벌주의’ 유형이라 명명하였다.¹⁴⁾ 잠재집단의 명명과 상대적 비율을 <표 6>에 정리하였다.

잠재집단별로 살펴보면, 불평등 불공정형(1집단)은 모든 영역의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에 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 여성과 남성, 청년과 장년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한 항목응답확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 높지만, 모든 항목에서 0에 가까운 응답확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학력, 학벌,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젠더, 세대,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이 모두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반-학벌주의 유형(2집단)의 경우, 인서울과 지방대 그리고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 임금 격차에 관해서는 0에 가까운 항목 응답확률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청년과 장년, 여성과 남성, 고졸과 대졸 간 임금격차의 공정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학벌주의 유형은 대체로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공정하지는 않다고 평가하지만, 대졸,

¹⁴⁾ 채효정(2020)은 97년 IMF 사태 이후 청년층이 사회 진출을 유예하여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학력 인플레이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명문대’의 가치는 오히려 늘어났음을 지적하였다. 즉, 학력의 가치는 떨어졌으나 학벌의 가치는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이다. 채효정은 이를 “무가치한 학벌이 가치있는 학벌을 지탱시키는 구조”(박권일 외, 2021: 99)라 설명하였는데 2집단과 3집단의 경우 이러한 학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만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반-학벌주의 그리고 학벌주의라 각각 명명하였다.



<그림 1> 사회적 집단 간 공정성 인식 유형

<표 6> 잠재집단 명명과 상대적 비율

집단	명명	상대적 비율
1집단	불평등 불공정형	40.76%
2집단	반-학벌주의	23.46%
3집단	학벌주의	21.17%
4집단	불평등 공정형	14.61%

장년, 남성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반-학벌주의 유형의 공정성 인식은 학벌과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평가가 연계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이 채용과정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좋은’ 일

자리를 향한 기대감이 낮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벌보다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불평등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 ‘기업은 원래 이윤추구를 하는 곳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일종의 체념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 제정임과 곽영신(2021)이 묘사한 것처럼 지방대생들이 사기업보다 학벌 차별이 덜 할 거라는 기대 하에 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취직 목표로 삼고 있기에, 학벌에 비해 사기업의 규모나 고용형태에 불공정성을 덜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반면, 학벌주의 유형(3집단)은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반-학벌주의 유형과 비슷하게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나, 학벌에 따른 불평등은 매우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인서울, 명문대생과 지방대, 비명문대생 간의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평가한다. 특이한 점은 이들의 공정성 인식이 학벌에 따른 불평등을 옹호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벌은 그 자체로도 문화적·상징적 자원이 되지만,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학벌주의 유형은 학벌에 따른 불평등은 매우 긍정하지만 학벌이 좋은 사람에게 훨씬 유리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에 주어지는 임금 프리미엄을 매우 긍정하지는 않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벌과 노동시장 지위가 연계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즉, 자신이 학벌에 비해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학벌을 강조하며 동시에 노동시장 불평등을 비판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공정형(4집단)은 대부분의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성취 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매우 공정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귀속 지위라 볼 수 있는 성별, 세대,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공정하다

고 평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공정하다고 평가한다.

도출된 잠재집단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을 분류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전체 표본의 40% 정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학벌에 따른 불평등은 매우 불공정하지만, 그 외 영역의 불평등은 학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20% 정도 존재한다. 이들의 불공정성 인식은 주로 학벌에 따른 차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영역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정당하다고 평가하지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지도 않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학벌에 따른 불평등은 매우 공정하지만, 그 외의 영역의 불평등은 학벌보다 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또 20% 정도 존재한다. 이들의 불공정성 인식은 학벌에 따른 차등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민감하게 작동할 것이며, 반-학벌주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그 외 영역의 불평등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사는 아닐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이 15% 정도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의 불평등 관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출신 계층에 따른 불평등도 공정하다고 평가한다.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불평등 관계는 정당하고 용인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없는 ‘공정한 불평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네 유형의 공정성 인식 집단에게 공정성이란, 1)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 완화, 2) 학벌에 따른 불평등이 없는 것, 3) 학벌에 따른 차등 보상이 충실하게 주어지는 것, 4)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불평등’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집단의 기초 정보를 아래 <표 7>에 정리하였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불평등 불공정형이 가장 많은 가운데, 3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불평등 불공정형 비율

<표 7> 잠재집단별 기초 특성

		불평등 불공정형	반-학벌주 의	학벌주의	불평등 공정형	χ ² /F
연령	20대 초반	68	56	41	30	12.268 ⁺
		34.9%	28.7%	21.0%	15.4%	
	20대 후반	94	48	41	33	
		43.5%	22.2%	19.0%	15.3%	
	30대 초반	97	33	33	26	
		51.3%	17.5%	17.5%	13.8%	
성별	여성	148	72	50	17	40.538 ^{***}
		51.57%	25.09%	17.42%	5.92%	
	남성	111	65	65	72	
		35.46%	20.77%	20.77%	23%	
학력	고졸 이하	67	40	31	7	23.811 ^{**}
		46.21%	27.59%	21.38%	4.83%	
	대학생	48	27	25	31	
		36.64%	20.61%	19.08%	23.66%	
	대졸	121	62	46	44	
		44.32%	22.71%	16.85%	16.12%	
	대학원 이상	23	8	13	7	
		45.10%	15.69%	25.49%	13.73%	
주관적 계층의식		4.49	4.69	4.97	5.42	28.96 ^{***}
		1.393	1.464	1.589	1.437	
지역	수도권	136	74	50	44	3.4
		44.74%	24.34%	16.45%	14.47%	
	비수도권	123	63	65	45	
		41.55%	21.28%	21.96%	15.20%	

1) *p*-values in parentheses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괄호안 값은 표준편차. %는 행 기준.

은 낮아지고 나머지 집단의 비율은 높아졌다. 20대 초반은 학벌주의 (21.0%)와 불평등 공정형(15.4%)의 비율도 높기는 하지만, 특히 반-

학벌주의의 비율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입시, 취업 준비 등으로 학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청년이 가장 많은 20대 초반이 학벌과 관련된 불평등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했는데, 청년 남성은 청년 여성보다 불평등 공정형 비율은 4배 정도 더 높게, 반-학벌주의 유형은 4% 정도 더 낮게 나타났다. 청년 남성의 23%가 불평등 공정형인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 불공정형 다음으로 불평등 공정형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청년 남성은 청년 여성에 비해 불평등의 정당성을 더 받아들이고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는데, 학력 불문 불평등 불공정형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불평등 공정형은 대학생에서(23.66%), 학벌주의는 대학원 이상에서(25.49%)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더 많은 불평등 관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이 많아지는 것이다.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일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으며, 지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2.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 유형 구조화 요인

다음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 유형이 구별되어 공정성 인식의 차이를 낳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8>에 정리하였다.

먼저, 불평등 불공정형과 반-학벌주의는 연령, 하향이동 전망, 일자리 위협감, 그리고 이념 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이 낮을수록, 하향이동 전망이 낮을수록, 세대 간 일자리 위협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불평등 불공정형보다는 반-학벌주의에 속한다. 연령이 낮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반-학벌주의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는데, 이는 학력과 학벌이 여전

<표 8> 공정성 인식 유형 구조화요인 다항로지트 분석 결과

기준: 불평등 불공정형	반-학벌주의	학벌주의	불평등 공정형
연령	-.079*	-.050	-.061
성별	.171	.760**	1.527***
결혼 여부	.635	.559	.381
자녀 유무	-.276	-.838	-.555
교육 수준	-.017	-.283*	-.113
수도권 거주	-.218	.367	-.138
종교 유무	-.299	-.082	-.123
ln(가구 소득)	-.044	.185	.145
주관적 계층의식	-.009	.198*	.340**
상향이동 전망	-.010	.626**	.491*
하향이동 전망	-.296*	.004	-.076
세대 간 일자리 위협감	-.347*	-.034	.112
성별 간 일자리 위협감	-.019	.060	-.125
이념 성향	.232**	.088	.363***
경쟁 공정	-.113	-.063	.310
인지적 종결욕구	.105	.215	.414*
권위주의 성향	-.014	-.092	.100
능력주의 원칙	-.083	-.286	.437*
결과공정성	.084	-.015	-.009
절차공정성	.049	.001	.440*
Cons	2.261	-2.762	-9.933***
<i>N</i>	521		
Pseudo <i>R</i> ²	0.1055		
LR Test	LR chi2(51) = 144.46 Prob > chi2 = 0.0000		

p-value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히 개인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청년이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학벌주의 유형은 하향이동

전망과 세대 간 일자리 위협감이 낮기에 청년과 장년 간 임금 격차를 공정하다고 평가한다. 서베이 데이터에 출신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벌에 따른 차별을 겪거나 열등감을 느낀 경험이 많은 청년이 반-학벌주의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 집단에 속하는 청년의 전형으로서, 대학에 입학했지만 그렇게 ‘학벌 좋은’ 대학은 아니고, 취직을 하기는 했지만 정년이 보장되며 경쟁이 매우 치열한 ‘좋은’ 직장은 아닌, 불평등 불공정형에 비해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보이기는 하나 학벌에 따른 차별에 민감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닌 그런 청년을 상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불평등 불공정형과 학벌주의의 구분에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상향이동 전망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 불공정형과 반-학벌주의 간의 관계에 비해 학벌주의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청년 남성이 청년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향이동 전망이 높을수록 불평등 불공정형보다 학벌주의에 속한다. 채효정(2020)은 예전에도 학벌주의가 존재하였으나 현재의 학벌은 “‘빼앗기’보다 ‘지키기’를 위한 방어적 수단”(박권일 외, 2020: 116)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학벌주의 유형은 뒤에 설명할 불평등 공정형처럼 성과와 기여를 강조하는 “강한 능력주의”(우명숙 외, 2021)를 선호하기 보다는, 여전히 명문대 졸업장이 계층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 믿으며 학벌을 지위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즉, 학벌이 곧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에 자신만만하여 학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과, 학벌이 능력이라고 여기지는 않지만 자신의 계층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 이 자원에 집착하는 사람 간에 학벌주의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학벌주의는 둘 중 후자에, 이후 분석할 불평등 공정형은 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불공정형과 불평등 공정형을 구분하는 특성은 성별, 주관적 계층의식, 상향이동 전망, 이념 성향, 인지적 종결욕구, 그리고 능력주의와 절차공정성 원칙 선호이다. 불평등 불공정형과 불평등 공정형은 다른 집단과 다르게 인지적-동기적 요인과 공정성 원칙 선호가 두 유형의 구분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인 계층의식과 상향이동 전망이 높을수록,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인지적 종결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강한 능력주의 원칙과 절차공정성 원칙을 선호할수록 불평등 불공정형보다는 불평등 공정형에 속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위와 그러한 지위에 대한 인식,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 혹은 역으로 자신의 현재 지위에 비추어 자신이 능력있다고 추론하여 생긴 자신만만함, 그리고 절차공정성을 중시하며 인지적 종결욕구 성향을 보이는 청년이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불평등 공정형은 학벌주의와 마찬가지로 학벌에 따른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평가하지만, 이러한 학벌이 능력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가진 자’로서 사회를 바라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하며, 불평등한 관계에서 낮은 지위에 놓인 이들을 능력과 성과가 부족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경쟁에서 밀려난 실패자로 평가하기에 모든 종류의 소득불평등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인지적 종결욕구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인식이 단기간 내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제 5 장 공정성 인식 유형의 정치사회적 함의

제 1 절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공정성 인식 유형이 공정성 논란 사건 평가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선 제3, 4장에서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공정성 인식 유형을 명목변수로 활용하여, 공정성 인식이 ‘인국공 사태’, ‘조국 사태’, ‘LH사태’ 등의 공정성 논란 사건을 평가하는 데에, 그리고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복지를 위한 세금 확대와 같은 복지태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앞선 장에서 활용한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으며,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른 한계효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제 2 절 변수 정의

우선 공정성 논란 사건 평가의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후 ‘평창단일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관련 특혜(이후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이후 ‘인국공 사태’),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이후 ‘성차별 면접’),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후 ‘LH사태’), 그리고 GS편의점 페미니스트 채용거부(이후 ‘페미 채용거부’)의 여섯 사건에 대한 평가를 (0) ‘매우 공정하다’ ~ (10) ‘매우 불공정하다’의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복지태도의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실업자들도 어느 정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쓴다면 세금을 더 낼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의 다섯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섯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하여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의 서열변수로 활용하였다.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 공정성 논란 사건 평가 변수 기초통계량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평창단일팀')	477	6.205	2.314	0	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관련 특혜 ('조국 사태')	572	7.839	2.482	0	10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인국공 사태')	538	6.684	2.665	0	10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LH사태')	580	8.797	1.974	0	10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성차별 면접')	561	7.504	2.768	0	10
GS편의점 페미니스트 채용거부 ('페미채용거부')	555	5.753	3.652	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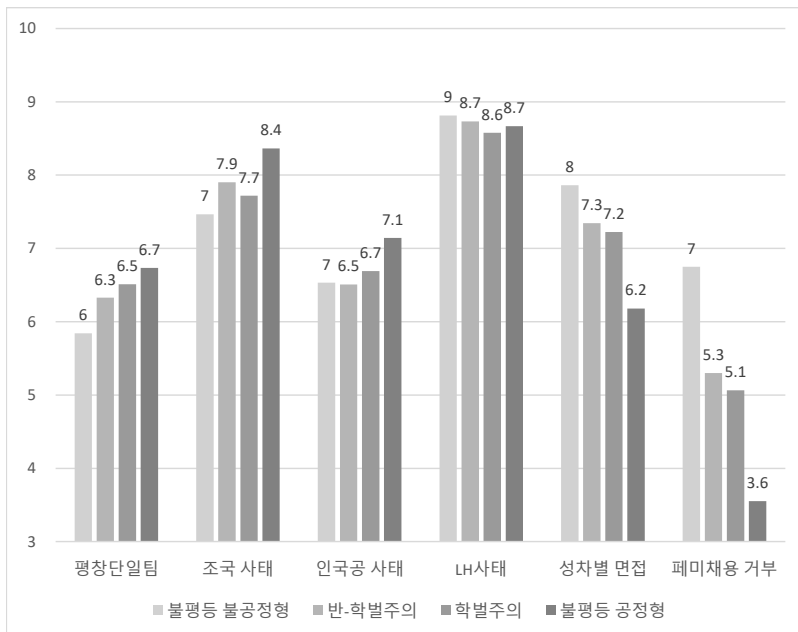
<표 10> 복지태도 변수 기초통계량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582	3.601	1.130	1	5
정부는 실업자들도 어느 정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585	3.460	1.023	1	5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577	2.402	1.063	1	5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쓴다면 세금을 더 낼 것이다	571	2.972	1.092	1	5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	584	3.596	1.201	1	5

제 3 절 분석 결과

1. 공정성 논란 사건 평가

지난 몇 년 간의 여러 공정성 논란 사건 평가에 있어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의 공정성 논란(평창단일팀,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 LH사태, 성차별 면접, 페미 채용거부)에 대한 네 가지 공정성 인식 유형의 평가를 다항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식 유형에 따른 한계효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공정성 인식 유형별 공정성 논란 사건 평가

먼저 ‘평창단일팀’의 경우 다른 모든 공정성 인식 유형이 불평등 불공정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해당 사건을 더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조국 사태’의 경우 불평등 공정형만이 불평등 불공정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학벌주의 유형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불평등 불공정형과 비슷한 평가를 내린다는 점은 ‘조국 사태’가 주로 명문대 입시 비리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던 점을 상기하면 아이러니하다. ‘인국공 사태’의 경우 불평등 공정형만이 불평등 불공정형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LH사태’의 경우, 공정성 인식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차별 면접’의 경우 학벌주의와 불평등 공정형이, ‘페미 채용거부’의 경우 모든 공정성 유형이 불평등 불공정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해당 사건이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젠더 및 페미니즘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의 경우 불평등 불공정형에 비해 다른 공정성 인식 유형들이 사건의 불공정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은 개별 공정성 논란 사건에 대해 매우 불공정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잠재집단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 불공정형과 불평등 공정형 간에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작게는 15%,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나, 두 공정성 인식 유형이 공정성 논란 사건 평가에 있어 상당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특히 페미 채용거부의 경우, (10) ‘매우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의 차이가 불평등 불공정형과 불평등 공정형 간에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가장 심한 그룹이 불평등 공정형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일수록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는 분석 결과는 공정성 인식과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표 11〉 공정성 논란 사건에 ‘매우 불공정하다’ 고 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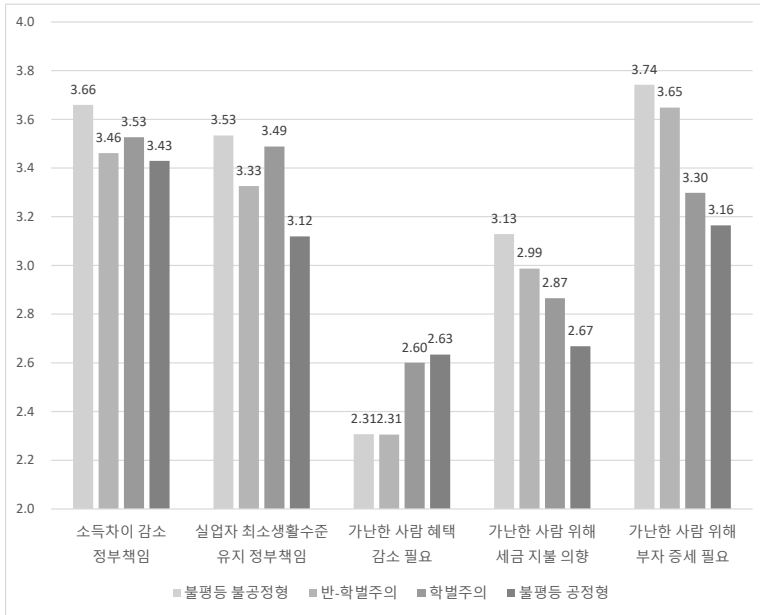
(10) ‘매우 불공정하다’	불평등 불공정형	반-학벌주의	학벌주의	불평등 공정형
평창단일팀	10.5%	12.2%	16.3%	25.9%
조국사태	34.9%	41.7%	39.8%	59.3%
인국공사태	18.5%	21.0%	23.2%	33.3%
LH사태	67.2%	59.7%	59.3%	57.0%
성차별 면접	50.6%	34.9%	33.6%	18.1%
페미채용거부	36.9%	21.6%	24.1%	4.2%

불평등 불공정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집단 표시.

2. 공정성 인식 유형과 복지태도

다음으로 공정성 인식 유형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부 책임 및 세금 확대 관련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식 유형에 따른 한계효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벌주의 유형과 불평등 공정형이 불평등 불공정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복지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학벌주의는 불평등 불공정형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거나 부자의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덜 동의한다. 한편, 불평등 공정형은 불평등 불공정형보다 실업자의 최소생활수준 유지가 정부책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을 위한 혜택을 더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없고 부자의 세금을 높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벌주의와 불평등 공정형의 복지태도를 비교하면, 학벌주의의 경우 ‘정말로’ 가난하여 복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한 복지에는 제한적



〈그림 3〉 공정성 인식 유형별 재분배태도

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불평등 공정형은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복지에도 반대하며 전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등 더 부정적인 복지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학벌주의 유형과 불평등 공정형의 복지태도를 단순히 복지에 부정적인 유형으로 뭉뚱그리기보다는, 이들의 구체적인 복지태도가 ‘선별주의’와 ‘정부개입 일체 반대’와 같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반-학벌주의의 경우 불평등 불공정형보다 최소 생활 유지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에 덜 동의하는데, 이는 이 집단이 불평등 불공정형에 비해 하향이동 전망이나 일자리 위협감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학벌주의 유형은 학벌에 따른 차별에 민감한 것에 비해 일자리를 잃고 하층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덜 느끼기에 정부에 의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 요구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은 사회 불평등의 공정성에 관해 뚜렷하고 잘 조직된 인식을

보이기보다는 학벌에 따른 차별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종의 자기 정체성 보호를 위한 공정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제 6 장 결론

청년들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어떤 공정성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가?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어느 정도의 세대적 동질성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지난 몇 년간의 공정성 논란 사건들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와 그들의 복지 태도와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본 연구는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특정한 몇몇 불평등 관계들에서의 자원분배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정성 인식을 여러 사회적 집단 간 대립의 형태로 측정함으로써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다차원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을 실제하는 불평등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로 정의한 뒤, 다중 회귀분석과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개별 공정성 평가가 어떤 정의태도를 구성하고 분배정의와 관련된 공정성 스키마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공정성 인식을 구조화하는 요인들과 더불어 공정성 인식이 정치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임으로써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 형성 기제와 분석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불평등 영역에서 청년들의 인식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지 파악하여 청년층 공정성 인식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은 성별과 계층에 따라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성취 지위에 따른 불평등에서는 사회적 위치가, 귀속 지위에 따른 불평등에서는 정치적 믿음 및 태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남성이 청년 여성보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 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학벌과 관련된 불평등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상향이동 전망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으며, 젠더, 세대, 계층과 관련된 불평등에서는 보수적 이념 성향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같은 소득불평등이라고 하더라도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청년층의 삶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들 또한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은 ‘불평등 불공정형’과 ‘불평등 공정형’, ‘반-학벌주의’와 ‘학벌주의’의 네 가지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학벌과 관련된 불평등에서 공정성 인식의 이질성이 두드러졌다. 네 종류의 공정성 인식 유형은 전반적인 사회적 집단 간 소득불평등, 그리고 학벌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완화 혹은 유지에 있어 서로 다른 답을 ‘공정’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다른 영역의 불평등에서는 중도적 입장을 보이는 청년들이 많았던 반면, 학벌 영역에서는 불평등이 ‘공정하다’ 혹은 ‘불공정하다’로 인식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역시 현실 사회에서는 학벌과 연계된 형태로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지만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학벌에 따른 불평등이 노동시장 지위, 출신 계층 등 다른 불평등과 연계되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평가들은 서로 간 연계되지 못한 상태로 분절적인 공정성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은 특정 코호트에서 갑자기 등장한 독특한 세대적 특성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에 누적되어 온 학벌주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불평등의 작동방식이 아닌 학벌이

라는 개별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청년층이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 유형은 개별 공정성 논란 사건에 대한 평가는 물론, 그들의 복지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벌주의’ 유형과 ‘불평등 공정형’은 ‘불평등 불공정형’과 ‘반-학벌주의’ 유형보다 개별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불공정성 인식이 더 높았으며 복지태도 역시 더 부정적이었다. 특히, 복지태도의 경우 ‘학벌주의’ 유형은 사회적 집단 간 격차 축소는 꺼려하지만 최소한의 복지는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불평등 공정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가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개인이 ‘공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에 따라 정치사회적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집단 간 소득격차와 분배정의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다차원성과 그것의 유형 및 결정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분배 패러다임(Young, 2000)에 기초한 공정성 개념이 포괄하기 어려운 지배, 억압, 인정, 그리고 차이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청년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분석하였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청년 개인의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지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한계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횡단면 데이터는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이 사회적 사건 및 담론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온 양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시

계열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공정성 인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몇 가지 한계에도,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이 이토록 불평등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청년층은 공정성에 민감하다’는 단순한 세대론을 넘어 ‘어떤’ 청년이, ‘어떤’ 공정성에, ‘왜’ 민감한 것인지 더욱 구체적인 공정성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호. (2018).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공정성. *지식의 지평*, (25), 6-23.
- 김석호, 이한주, & 오재호. (2021).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시공사.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207-248.
- 김선기, 천주희, 최태섭, & 최혁규. (2019). 통계로 본 서울시 청년의 삶 연구보고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1-224.
-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87-105.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영순, & 노정호. (2017).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6(3), 109-142.
- 김영순, &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11-240.
- 김영주, & 나진경. (2018).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경험 연구 개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3), 313-347.
- 김윤태, 유승호, & 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183-212.
- 김재우. (2019). 한국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기회공정성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도: 성별·연령집단별 매개과정과 조절작용. *행정논총*, 97-127.

- 김정희원. (2020). ‘공정’의 이데올로기, 문제화를 넘어 대안을 모색할 때. *황해문화*, 24-43.
- 김태심. (2020).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28(1), 129-167.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 김희자. (2013). 계급, 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35-68.
- 류만희, & 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인식, 계층, 자기이해 (self-interest) 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마경희 외. (2020). 청년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마이클 영. (2020). 『능력주의: 2034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엘리트 계급의 세습 이야기』. 이매진.
- 모지환, & 김행열. (2009).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24(1), 179-199.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146-168.
- 박권일, 홍세화, 채효정, 정용주, & 이유림. (2020). 『능력주의와 불평등: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교육공동체벗.
- 박길성. (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3-25.
- 박선경, & 이내영. (2018).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

- 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현대정치연구*, 11(3), 5-32.
- 박효민. (2019).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11-211.
- 박효민, & 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19-260.
- 서복경, & 황아란. (2012).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 중심의 정책평가: 고령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5(1), 5-34.
- 신광영. (2013).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 안상훈. (2020). 한국인의 복지 태도: 특성과 추세. *보건복지포럼*, 20(3), 31-44.
- 안상훈, 김영미, & 김수완. (2021). 한국인의 복지태도: 균열구조의 형성과 변화. *보건사회연구*, 41(1), 42-60.
- 여승현. (2016). 세대에 따른 경제적불평등 인식과 복지태도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 여유진, & 김영순. (2015). 한국의 중간층은 어떤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중간층의 복지태도와 복지국가 전망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49(4), 335-362.
- 우명숙, & 남은영. (2021).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1), 201-244.
- 이보운, & 김동훈. (2015).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 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31(2), 149-176.
- 이상록, & 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29(3), 433-458.
- 이상은, & 김희찬. (2019). 한국인 복지인식의 변화와 국제비교: 수

- 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지지의 계층 간 차이. *비관사회정책*, (62), 213-250.
- 이수빈. (2016). 복지태도, 계급, 그리고 인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49-566.
- 이웅, & 임란. (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4), 93-122.
- 이재경. (2018). 젠더 간의 공정성과 성평등(gender equality). *지식의 지평*(25), 24-37.
- 이지호, & 황아란. (2016).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257-285.
- 이충환. (2015). 빈곤 원인 인식과 불평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375-401.
- 이한나, & 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 이현우. (2013).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국가 비교. *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 95-119.
- 이현우, & 박시남. (2016).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이익을 넘어서. *Oughtopia*, 31(1), 267-298.
- 이희정. (2018). 공정성 원칙을 둘러싼 갈등과 변화. *문화와 사회*, 26(2), 7-60.
-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 장상우, 김상욱, & 신승배. (2015).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인식』.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장혜경. (2020). 고용과 노동에서의 공정성, 어떻게 볼 것인가?: 인천 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44-61.
- 전상진.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193-230.
- 전성표. (2006). 배분적 정의, 과정적 정의 및 인간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 *한국사회학*, 40(6), 92-127.
- 제정입, & 광영신. (2021).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 지방대를 둘러싼 거대한 불공정』. 오월의봄.
- 주은선, & 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최만식, & 조용하. (2014). 교원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분석.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7(4), 1-31.
- 최유석. (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57-83.
- 하상응, & 이보미. (2017).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의 심리적 결정 요인들: 우파 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6(1), 5-37.
- 황선재, & 계봉오.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사례와 함의. *한국인구학*, 41(4), 65-88.
- 황정미. (2016).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23(2), 311-346.

- Achterberg, P., van der Veen, R., & Raven, J. (2014). The ideological roots of the support for welfare state reform: Support for distributive and commodifying reform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3(2), 215-226.
-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267-299.
- Alesina, A., & Angeletos, G. M. (2005). Fairne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5(4), 960-980.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avetta, S., Li Donni, P., & Marino, M. (2019).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perceived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5(2), 264-292.
- Benabou, R., & Ok, E. A. (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447-487.
- Berger, J., Ridgeway, C. L., & Zelditch, M. (2002). Construction of status and referential structures. *Sociological Theory*, 20(2), 157-179.
- Berger, J., Zelditch, M., Anderson, B., & Cohen, B. P. (1972). Structural aspects of distributive justice: A status value formulation. *Sociological theories in progress*, 2, 119-146.
- Billig, M. (1976). *Social psychology and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Blumer, H. (1958).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1), 3-7.
- Bonikowski, B., & DiMaggio, P. (2016). Varieties of American popula

- r nation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5), 949-980.
- _____ (2021). Mapping culture with latent class analysis: A response to Eger and Hjerm. *Nations and Nationalism*.
- Brown, R. (1995). *Prejudice: Its soci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Buchanan, A., & Mathieu, D. (1986). Philosophy and justice. *Justice*. Springer, Boston, MA.
- Buscha, F. (2012). Financial expectations and the 'left-right' political value scale: Testing for the POUM hypothesis. *Economics letters*, 115(3), 460-464.
- Champernowne, D. G., & Cowell, F. A. (1998). *Economic inequality and income distrib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cchi, D., & Filippin, A. (2004).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POUM hypothesis*.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Chirumbolo, A., Areni, A., & Sensales, G. (2004). Need for cognitive closure and politics: Voting, political attitudes and attributional styl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9(4), 245-253.
- Cook, K. S., & Parcel, T. L. (1977). Equity theor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Sociological Inquiry*, 47(2), 75-88.
- Costa-Lopes, R., Dovidio, J. F., Pereira, C. R., & Jost, J. T. (2013).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legitimation of social inequality: Past, present and fut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4), 229-237.
- d'Anjou, L., Steijn, A., & Van Aarsen, D. (1995). Social position, ideology, and distributive justice. *Social Justice Research*, 8(4), 351-384.
- Deutsch, M. (1975). Equity, equality, and need: What determines wh

- ich value will be used as the basis of distributive jus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 DiMaggio, P., Sotoudeh, R., Goldberg, A., & Shepherd, H. (2018). Culture out of attitudes: Relationality,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attitudes toward science and religion in the US. *Poetics*, 68, 31-51.
- Duckitt, J., and C. G. Sibley. (2010). Personality, Ideology, Prejudice, and Politics: A Dual-Process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78-6: 1861-1894.
- Engelhardt, & Wagener. (2014).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4838.
- Faia, M. A. (1980). The vagaries of the vignette world: A comment on Alves and Rossi.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4), 951-954.
- Gimpelson, V., & Treisman, D. (2018). Misperceiving inequality. *Economics & Politics*, 30(1), 27-54.
- Greenberg, J. (1990). Employee theft as a reaction to underpayment inequity: The hidden cost of pay cu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5), 561.
- Greenberg, J., & Colquitt, J. A. (Eds.). (2013). *Handbook of organizational justice*. Psychology Press.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Hauser, O. P., & Norton, M. I. (2017). (Mis)perceptions of inequalit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8, 21-25.
- Ho, A. K., Sidanius, J., Kteily, N., Sheehy-Skeffington, J., Pratto, F.,

- Henkel, K. E., Foels, R., & Stewart, A. L. (2015).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₇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1003–1028.
- Hollander, J. A., & Howard, J. A. (2000).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on social inequaliti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338–351.
- Homans, G. C. (1974).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Harcourt Brace Jovanovich.
- Hunzaker, M. F., & Valentino, L. (2019). Mapping cultural schemas: From theory to meth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4(5), 950–981.
- Jasso, G., & Rossi, P. H. (1977). Distributive justice and earned inco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9–651.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Jost, J. T., Pelham, B.W., & Carvallo, M. (2002). Non-conscious forms of system justification: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preferences for higher status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 Jost, J. T., Pelham, B. W., Sheldon, O., & Ni Sullivan, B. (2003). Social inequality and the reduction of ideological dissonance on behalf of the system: Evidence of enhanced system justification among the disadvantag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3–36.

- Jost, J. T., & Thompson, E. P. (2000). Group-based dominance and opposition to equality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self-esteem, ethnocentrism, and social policy attitudes among Afric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 209–232.
- Kluegel, J. R., & Smith, E. R. (1986). *Beliefs without inequality: Americans' view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Hawthorne, NJ: Aldine de Gruyter.
- Kruglanski, A. W., & Mayselless, O. (1988). Contextual effects in hypothesis testing: The role of competing alternatives and epistemic motivations. *Social Cognition*, 6(1), 1–20.
- Kruglanski, A. W., & Webster, D. M. (1996). Motivated closing of the mind: “Seizing” and “freezing”. *Psychological review*, 103(2), 263.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Lind, E. A., & Tyler, T. 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Louis, W. R., Duck, J. M., Terry, D. J., Schuller, R. A., & Lalonde, R. N. (2007). Why do citizens want to keep refugees out? Threats, fairness and hostile norms in the treatment of asylum seek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1), 53–73.
- McLaren, L. M. (2003). Anti-immigrant prejudice in Europe: Contact, threat perception, and preferences for the exclusion of migrants. *Social forces*, 81(3), 909–936.
- Mikula, G. (1984). II. Justice and fair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

- thoughts and suggestions. *The Social Dimension: Volume 1: European Developments in Social Psychology*, 1, 204.
- Miller, D. (2017). Distributive justice: What the people think. *Distributive justice*. Routledge.
- Minard, R. D. (1952). Race relationships in the Pocahontas coal field. *Journal of Social Issues*, 8(1), 29-44.
- Ng, S. H., & Allen, M. W. (2005). Perception of economic distributive justice: Exploring leading theori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3(5), 435-454.
- Niehues, J. (2014). Subjective perceptions of inequality and redistributive preferenc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Cologn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IW-TRENDS Discussion Paper*, 2, 1-23.
- Oakes, P. J., Haslam, S. A., & Turner, J. C. (1994). *Stereotyping and social reality*. Blackwell Publishing.
- Opatow, S. (1990). Moral exclusion and injustice: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6(1), 1-20.
- Perry, R., and C. G. Sibley. (2012). Big-Five Personality Prospectively Predict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1: 3-8.
- Rainer, H., & Siedler, T. (2008). Subjective income and employment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Economics Letters*, 99(3), 449-453.
- Ravallion, M., & Lokshin, M. (2000). Who wants to redistribute?: The tunnel effect in 1990s Russi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1), 87-104.

- Reeskens, T., & Van Oorschot, W. (2013). Equity, equality, or need? A study of popular preferences for welfare redistribution principles across 24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0(8), 1174-1195.
- Reicher, S., & Hopkins, N. (1996). Self-category constructions in political rhetoric; an analysis of Thatcher's and Kinnock's speeches concerning the British miners' strike (1984-5).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3), 353-371.
- Reis, H. T. (1984). The multidimensionality of justice. *The sense of injustice*. Springer, Boston, MA.
- Reynolds, K. J., Turner, J. C., Haslam, S. A., & Ryan, M. K. (2001). The role of personality and group factors in explaining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5), 427-434.
- Scheve, K. F., & Slaughter, M. J. (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1), 133-145.
- Schmitt, M. T., Branscombe, N. R., & Kappen, D. M. (2003). Attitudes toward group-based inequality: Social dominance or social ident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2), 161-186.
- Scott, J. T., Matland, R. E., Michelbach, P. A., & Bornstein, B. H. (2001). Just deserts: An experimental study of distributive justice no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49-767.
- Shariff, A. F., Wiwad, D., & Aknin, L. B. (2016). Income mobility breeds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Cross-national and experimental evid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1(3), 373-380.

- Shepelak, N. J., & Alwin, D. F. (1986). Beliefs about inequality and perceptions of distributive justi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46.
- Skitka, L. J., & Tetlock, P. E. (1992). Allocating scarce resources: A contingency model of distributive just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6), 491-522.
- Skitka, L. J., Winkler, J., & Hutchinson, S. (2003). Are outcome fairness and outcome favorability distinguishable psychological constructs? A meta-analytic review. *Social justice research*, 16(4), 309-341.
- Staerklé, C., Likki, T., & Scheidegger, R. (2012). A normative approach to welfare attitudes. *Contested welfare states: Welfare attitudes in Europe and beyond*, 81.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cademic Press.
- _____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Taylor-Gooby, P. (Ed.). (2001). *Welfare states under pressure*. Sage.
- Tornblom, K. Y., & Jonsson, D. R. (1985). Subrules of the equality and contribution principles: Their perceived fairness in distribution and retribu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249-26

1.

- Turner, J. C. (2010).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Rediscovering social identity*. Psychology Press.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Basil Blackwell.
- Turner, J. C., & Onorato, R. S. (1999).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the self-concept: A self-categorization perspective. *The psychology of the social self*, 11-46.
- Van Lange, P. A., Bekkers, R., Chirumbolo, A., & Leone, L. (2012). Are Conservatives Less Likely to be Prosocial than Liberals? From Games to Ideology, Political Preferences and Vot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5), 461-473.
- Wallace, M., & Figueroa, R. (2012). Determinants of perceived immigrant job threat in the American states. *Sociological Perspectives*, 55(4), 583-612.
- Walster, E., Berscheid, E., & Walster, G. W. (1973). New directions in equit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2), 151.
- Wenzel, M. (2000). Justice and identity: The significance of inclusion for perceptions of entitlement and the justice mo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2), 157-176.
- _____ (2001). A social categorization approach to distributive justice: Social identity as the link between relevance of inputs and need for just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3), 315-335.
- Wilson, G. D. (Ed.). (1973).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London

n: Academic Press.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Zinni Jr, F. P. (1995). The sense of injustice: The effects of situation, beliefs, and identity. *Social science quarterly*, 419-437.

Abstract

Fairness Perception regarding Income Inequality
among Young People
: Focusing on the Diversity of Unequal Relationships

Park Hyeona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fairness perception among young people regarding income inequality in various social relationships.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focus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fairness perception, but have not examined that fairness perception could be heterogeneous depending on the types of an unequal relationship. The fairness perception can be multifaceted depending on the complex social identity of an individual, and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where the fairness controversy is mainly understood as a conflict over resource distribution in some unequal relationships, the multidimensionality of fairness perception deserves greater attention. This study, therefore, defines fairness perception as an evaluation of the legitimacy of the actual inequality and deals with individual evaluations of inequality related to educational background, labor market, gender, generation, and class origin. It aimed at exploring what kind of justice attitude is constituted by the fairness evaluation of various kinds of inequality and how the fairness schema related to distributive justice has been formed. After investigating the fairness perception of young Koreans, a further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specific formation mechanism to determine

how this perception is structured under the influence of factors in two dimensions which are social position and political beliefs and attitudes, and also attempted to suggest the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fairness percep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ducted three major analyzes using the data of 「Survey on Koreans' Attitudes toward Generation and Society in general 2021」. First,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perceived fairness in income inequality were individually identified by the unequal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erceived fairness among young people was heterogeneous based on gender and class. Social position exerted a great influence on inequality due to attained status, and political beliefs and attitudes had a huge effect on inequality caused by ascribed status. There was a tendency for young men to evaluate income inequality between social groups as fairer than young women; a similar result was obtained from the group of people who have got higher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than others. The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prospects of upward mobility affected inequality in academic background, whereas ideological factors such as conservative beliefs wield a great influence on inequality in gender, generation, and class origin. Even though it is about the perceived fairness on the same issue, income inequality, factors with great influence were foun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an unequal relationship. It was also found that not only socioeconomic status, but also various non-economic factors related to young people's perception of uncertainty in life had a strong influence.

Next,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it aimed at discovering what kind of structured connection pattern the fairness evaluations for various unequal relationships showed and how they appeared as a fairness schem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young people's perceived fairnes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Unfair-inequality type, Fair-inequality

type, Education-discrimination type, and Education-anti-discrimination type. The four types of fairness perception suggest different answers as 'fairness' in alleviating or maintaining income inequality among social groups and income inequality based on educational background. Educational background plays a key role in the heterogeneity of young people's fairness perception. While many young people take a neutral position in other areas of inequality, the polarization of perception appears in the area of educational background as inequality due to education is unfair or fair. These results reveal that the perceived fairness among young people has been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a clique culture in academia that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in Korean society.

Finally, the association between other political and social attitudes and the fairness perception type was reveal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ype of fairness perception affects not only the evaluation of individual fairness controversial cases but too the welfare attitude. Both the Education-discrimination type and the Fair-inequality type showed a higher perception of inequity toward individual social events and a more negative welfare attitude than the Unfair-inequality type and the Education-anti-discrimination typ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welfare attitudes, the Education-discrimination type is reluctant to narrow the gap between social groups but believes in the necessity of a minimum amount of welfare, while the Fair-inequality type pursues a small government and opposes all policies that the government attempts to resolve inequal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elying on how young individuals define fairness, their political and social attitudes may appear differently.

This study tried to empirically reveal the multidimensionality of the fairness perception regarding the income gap and distributive justice between social groups, and its types and determinant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ived fairness among

young people was heterogeneous according to the types of unequal relationships and was influenced by individual social position and political beliefs and attitud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a new method of measuring fairness perception and reveals a complex aspect of young people's fairness perception. Beyond the generational theory that 'young people are sensitive to fairness' , more specific fairness studies should be continued about which young people are sensitive to which fairness and why.

keywords: Fairness, Inequality, Youth, Social Group, Latent Class Analysis
Student Number: 2020-20401